

# 창의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적 인문정책 연구

－ 독일, 프랑스의 창의적 인문문화정책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우호 외



### 연구수행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덕성여자대학교	조우호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윤순식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황선경 교수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년도 인문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요 약

본 연구는 독일과 프랑스의 창의적 인문·문화정책의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사회를 위한 인문정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을 위한 인문학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인문학의 의미와 그에 따른 인문정책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근대 독일사회에서 인문정책의 방향은 사회의 창의적 발전을 위해 인문학의 다양한 자원과 요소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거나 융합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합적 시각에서 관리하고 지원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20세기 이후 독일사회는 크게 보면 20세기 초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와 21세기 현재 독일사회의 창의적 발전과 성공으로 대별해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자의 경우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인문학과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문정책의 부재를 주목한다. 후자의 성공에서는 사회적 소통과 통합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끌어 내는 정부와 다양한 거버넌스들의 협력과 공존의 시스템에 주목하며, 그 시스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일상의 삶과 연결하는 데 인문학과 인문정책의 역할이 있음을 지적한다.

근대 이후 프랑스의 인문정책은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회 구현을 위한 인문적 문화정책의 구축에 집중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프랑수아 1세, 루이 13세, 14세, 그리고 드골과 미테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정부는 문화가 국부의 원천이며, 국가의 평화와 안정, 화합을 이룩하는 초석이라는 시각에서 문화정책을 구축했다. 세계 최고의 문화 경쟁력과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그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국가 정체성의 수호와 국민적 통합은 막대한 행정적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것이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민주적인 문화정책의 강점은 한국적 인문정책의 구축에 접목시킬 수 있고, 프랑스 문화정책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한국적 인문정책의 실행에서 부딪힐 수 있는 난관들이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예보’로 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두 국가의 모델을 검토하여, 그 각각의 인문학 지원과 인문정책에 대한 방안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의 연구 방향이나 인문정책에 대한 제안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인문학 연구와 인문정책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현재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창의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적 인문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창의사회, 인문정책, 문화정책, 사회통합, 소통, 통합적 인문학, 인문정신, 인문진흥상설기구, 독일, 프랑스

# ABSTRACT

A Study of Korean Humanities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a creative society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German and French creative Humanities Culture Policy Models

This paper analyses creative policy of humanity and culture in Germany and France based on which an attempt is made to contemplate humanities policy for our society. The study in this paper distinguishes itself from previous works in a sense that it is not a study of roles and nature of humanity for individuals but a study to understand meaning of humanity for social development and to identify humanities policy that would help the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achieve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 1) To examine two models of Germany and France to evaluate each country's support for humanity as well as plans for humanities policy.
- 2) To contemplate overall progress in humanity and humanities policy, including the current direction of humanity study in our society and the proposals for humanities policy, based on the above outcome.
- 3) To identify core of current problems that imped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nd to propose and integrated humanities policy as a solution to lead Korea to a more creative society.

Keyword : Keyword: creative community, humanities policy, culture policy, society integration, communication, integrative humanities, humanistic spirit, permanent organization for promotion of humanities.

---

# 목차

---

1. 연구 배경
2. 연구 목표
3. 연구 진행과정
4. 연구 내용
  - 4.1. 독일사회 모델에서 인문학의 역할
    - 4.1.1. 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독일시민사회 발전의 모델
    - 4.1.2. 20세기 초 독일사회의 실패와 인문학의 역할
    - 4.1.3. 현재 독일사회 발전의 원동력과 인문학의 역할
    - 4.1.4. 독일 통일조약과 베를린 문화과학부의 인문·문화정책 자료
  - 4.2. 프랑스사회 모델에서 인문학의 역할
    - 4.2.1. 프랑스의 문화와 정치
    - 4.2.2. 16-19세기 프랑스 국가 주도의 문화예술 정책의 전통
    - 4.2.3. 20세기 프랑스의 민주적 문화정책
      - 4.2.3.1. 앙드레 말로의 문화정책: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 4.2.3.2. 사회당 미테랑 정부의 문화부 장관 자크 랑
    - 4.2.4. 프랑스 정부의 대외 문화정책
    - 4.2.5. 문화강국 프랑스의 문화정책에서 배울 점

### 4.3. 한국적 인문정책의 방향

#### 4.3.1. 독일과 프랑스의 인문·문화정책 모델과 한국적 인문 정책의 구축

#### 4.3.2. 디지털 시대와 정보통신사회의 인문정책

## 5. 결론

## 참고문헌

## 1. 연구 배경

인문학은 시대의 의미와 사회의 발전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인문학의 속성과 연관이 있다. 인문학은 인간과 사물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탐구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인문학이 인간의 본성과 인간 존재의 조건, 인간 행복의 조건 등, 요컨대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탐구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 시대에 인문학과 인문정신이 필요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내지 공학기술은 한 사회발전의 속도와 효율성 및 발전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 발전의 방향을 정하거나 그것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가진다. 그들의 관심의 대상은 사회이거나 자연의 법칙 혹은 과학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은 인간이고 그 사회의 발전의 주체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발전의 핵심적 상수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이런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문학은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문학은 인간을 모든 영역의 중심에 두며, 인간 상호의 소통과 인간 사회의 통합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인간에게 존재하는 창의성의 본질도 탐구한다. 따라서 이제 인문학은 지속적 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의 원리와 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에 대한 이런 요구가 필요한 이유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근대화를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라는 점이다. 이러한 급속한 근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물질적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관과 문화의 근대화가 담보되지는 않았다. 외적인 근대화에 따라 이제 우리 사회의 외적인 발전에는 서양과 경쟁할 수 있을 수준이 되었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발전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의적인 발전의 방향에 대한 모색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인문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인문학은 우리 사회 발전의 새

로운 내적인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인문학이 사회 발전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문정책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연구는 인문학이 현재 우리 사회의 창의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인문정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창의적 발전을 위한 인문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창의적 모델이다. 세계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기부터 인문학의 발전에 필요한 담론과 철학적, 사상적 기초를 제공해 왔던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대비되는 정치와 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근대 인문학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 그것은 이들 국가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인문학이 지니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과감한 인문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 정부나 공적 차원의 지원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창의적 사상과 이념을 펼칠 수 있게 지원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근대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한 인문정책을 모델로 삼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창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로서 창조적이고 한국적인 인문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표

본 연구는 기존의 인문학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세계사적 측면에서 역사적 창의사회의 모델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문학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향처럼, 개인을 위한 인문학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인문학의 의미와 그에 따른 인문정책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근대 독일사회에서 인문정책의 방향은 사회의 창의적 발전을 위해 인문학의 다양한 자원과 요소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거나 융합될 수 있게 통합적 시각에서 관리하고 적용할 수 있게 지원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세기 들어서 독일



사회는 크게 보면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을 거두는데, 20세기 초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와 21세기 현재 독일사회의 창의적 발전과 성공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자의 경우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인문학과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문정책의 부재를 주목하고자 한다. 후자의 성공 사례에서는 일단 사회적 소통과 통합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끌어 내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거버넌스들의 협력과 공존의 시스템에 주목할 것이며, 그 시스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일상의 삶과 연결하는 데 인문학과 인문정책의 역할이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 이후 프랑스의 경우는 인문정책은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주로 창의적 사회 구현을 위한 인문적 문화정책의 구축에 집중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문예학술을 옹호·보호·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프랑수아 1세, 루이 13세, 루이 14세, 그리고 문화민주화 정책을 펼친 드골 대통령과 미테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정치인들은, 문화는 국부의 원천이며, 국가의 평화와 안정, 화합을 이룩하는 초석이라는 신념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예술창작을 후원했다. 프랑스의 세계 최고의 문화 경쟁력과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그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국가 정체성의 수호와 국민적 통합은, 뜻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헌신과 막대한 행정적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단 프랑스의 민주적인 문화정책의 강점은, 한국적 인문정책의 구축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프랑스 문화정책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가 한국적 인문정책의 실행에서 부딪힐 수 있는 난관들이 무엇인지 미리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예보’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두 국가의 모델을 검토하여, 1) 그 각각의 인문학 지원과 인문정책에 대한 방안을 평가하고, 2)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의 연구 방향이나 인문정책에 대한 제안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인문학 연구와 인문정책에 대한 검토를 거쳐, 3) 현재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창의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적 인문정책을 제시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과학 내지 경영·경제적 시각과는 다른 인문학적 통합시각을 제시하고 이것을 인문정책과 연결하는 데 있다.

### 3. 연구 진행과정

#### 3.1. 선행연구 현황

한국적 인문정책이라는 현재의 국내·외 상황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창의사회 구현이라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 분야의 선행 연구는, 주로 인문학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실천적 인문정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신자유주의 및 국제화 체제에 의한 세계사적 정세의 변화와 국제경제의 환경 변화, 그에 따른 한국 사회의 경제 위기, 경쟁사회에서의 피폐해진 삶 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대안 제시를 향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 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 중 논문으로는, 인문학의 위기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유틀’ 모색(김진나, 1999), 프랑스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 프랑스와 미테랑의 집권기를 중심으로(김명섭, 1999),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정선양, 1999), 체제수호의 사상적 무기, 신사고에 의탁한 변화에의 갈망(오양열, 2002) 등에서 출발하여, 사회 인문학적 지평의 출발점인 ‘공공성의 역사학’에 대한 논의(백영서, 2010), 우리 시대 총체적 디지털화와 인문학의 미래에 관한 논의(박승억, 2010), 행복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에 관한 연구(홍병선, 2011), 인문학과 인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최현철, 2012) 등 한국적 인문정책 연구의 관심이 점차 실제적, 실천적 연구로도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행본 중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특성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창의적 문화사회에서 인문정책의 새로운 과제가 무엇인가를 고찰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임학순, 2003)이 눈에 띈다. 그 외 〈한국 인문정책의 변동과정 및 정책과제〉(염재호 외, 2002), 〈선진국 인문학 진흥체계와 한국 인문정책 연구기관 운영방안〉(전영평 외, 2004), 〈인문적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개발〉(박영근, 2007), 〈인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실천적 인문정책〉(박찬영, 2008) 등이 있는데, 이 저서들은 한국의 대안적 인문학 진흥체계가 어떠한 내용과 형식을 지녀야 할지 또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문학 진흥체계의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조건과 행정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수반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주제 관련 선행연구가 제시되었지만, 유럽 국가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창의적 문화정책과의 비교를 통한 인문학적 통합 연구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독일과 프랑스 사회 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던 인문학과 인문·문화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 3.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가 주로 한국 사회에서 내세울 수 있는 비전을 단편적 측면에서 연구기관 운영방안이라든가 인문 복지의 증진이라는 다소 지엽적이고 추상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발전적 통합과 공존, 그리고 창의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적 인문정책을 고찰하려고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선진국,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모델을 비교하며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인문학적 통합 시각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울러 정책적인 측면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차별성이 있다.

- 선행연구가 우리나라 인문정책, 특히 문화정책의 특성을 역사적으로 살피고 앞으로 창의적 문화사회에서 문화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탐색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창의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재적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전제 그리고 사회 내 다양한 이해들을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합의와 소통의 방식이 창의적 인문정책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러한 한국적 인문정책을 선진국의 모델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데 그 차별성이 있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행 연구	1	주요 선진국의 인문진흥 실태를 비교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인문학 및 인문실무 분야를 실효성 있게 진흥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설계함.	국외 사례 비교 분석	선진 각국의 인문학 진흥체계는 그 지원 대상을 인문학에만 국한하는 제한적 기관, 인문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영역을 지원하는 포괄적 기관, 지원을 위주로 하는 지원형 기관, 정책 및 연구의 기능을 위주로 하는 정책, 연구형 기관으로 유형화.
	2	창의적 문화정책은 각 영역별로 분절된 형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책대상인 국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국민은 단순히 수동적인 문화소비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창작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국내 동향 및 이론적 비전 고찰	창의적 문화사회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부응한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검토. 또한 문화정책의 의미와 목표, 문화산업정책의 동향과 과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추진체계 등을 다룸.
	3	인문복지의 개념을 통해 인문학 공급과 그 실천적 효용성을 제고하여 전사회적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나아가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인문학에 대한 적극적 향유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안 제시.	문헌분석, 현지조사, 사례연구, 참여 관찰 및 심층면담, 통계분석, 전문가 포럼	계층과 지역, 학력 차에 따른 인문학 수혜기회의 격차의 설명을 다각도로 제시함. 지방 문화원 내 인문강좌 현황과 요구. 개방형 인문강좌 개설 기관 사례조사들 통해 일반시민에 대한 실천적 인문학 강좌의 내용과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		창의사회 구현을 위해 현실적인 제문제 등에 대해 인문학적 통합 시각으로 분석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또한 우리가 선진일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인문학적 비전은 한국적 인문정책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적인 측면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 한국적 인문정책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평가를 독일, 프랑스 모델과 비교, 분석함.

## 4. 연구 내용

### 4.1. 독일사회 모델에서 인문학의 역할

#### 4.1.1. 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독일시민사회 발전의 모델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사회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언급할 수 있는 18-19세기 중반까지의 독일에서 사회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무엇보다 인문학의 창의성과 진취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문예사상과 역사 및 철학을 포괄하는 독일식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 혹은 (영미 학계와 국내의 용어를 사용하면) 인문과학 내지 인문학의 개념으로 보면, 계몽주의에서 고전주의를 거쳐 낭만주의에 이르는 시기로 규정된다. 지금까지 문예사상에서는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경향을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서 찾고 있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계몽주의가 가장 중요한 정신적, 철학적, 사회적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독일 정신과학에서 말하는 (인문학적) 계몽주의는 독일어 문화권에서 18세기 초중반에 발전한 정신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시기 독일의 계몽주의는 18세기 중반까지만 지속되고 그 이후는 고전주의 내지 낭만주의로 대체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의 비교적 짧은 고전주의 시기와 19세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활발히 전개된 독일 낭만주의가 이 시기의 문예 및 철학의 대표적 흐름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가장 최근 독일의 학계에서는 18세기부터 19세기 초중반까지에 이르는 이 시기를 독일식 계몽주의의 융성기인 ‘긴 18세기’로 규정하고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문학과 예술 및 철학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사상, 역사철학, 자연철학 사상 등을 포괄하는 전체 정신과학 내지 인문학적 시각으로 보면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철학적 흐름은 계몽주의라는 분석이다. 이 시기 독일의 계몽주의 사상은 독일의 18세기 다양한 근대사상의 토대가 되어 19세기 초 혹은 중반까지 지속되는 독일적 근대사상과 세계관, 사회관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긴 18세기를 통해 마련된 계몽주의 사회의 창의성이 독일사회의 근현대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21세기 현재 독일사회의 발전의 패러다

임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사회의 근현대적 발전의 토대가 된, 긴 18세기의 창의적 계몽주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비전

18세기 독일 계몽주의 사회는 전체적으로 역사적 발전에 대한 비전을 형성했다. 이 비전은 당대 독일사회 전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독일 계몽주의 사회는 독일에서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정치체제로 보면 절대계몽군주의 시대였다. 이 시기 독일은 이웃 프랑스나 영국과는 달리 수많은 군주들이 할거하여 독립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기존 학설은 이런 독일의 상황을 봉건적 후진성으로 규정했지만, 최근의 새로운 연구들은 이것이 결코 후진성이 아니라 발전의 기초였음을 지적한다. (Ralf Beuthan 2006, Klaus Vieweg 2002)

당대 독일, 즉 독일신성로마제국은 오스트리아황제국과 프로이센 왕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많은 독립 군소군주국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군소군주국들은 주로 공작이 다스리는 공국들로 각각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고, 외형적으로 귀족 중심의 봉건 사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 군주 귀족들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공작, 귀족들의 통치를 유지하는 정치적 통치기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과 소통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군소군주국들의 통치면적이 턱없이 작은 지역이었다는 데 있다. 당시 독일신성로마제국에서 프로이센이나 그 외의 몇 군주국들은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국들은 중앙집권의 프랑스나 영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조그만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조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공국은 그 공국에 속하는 작은 지방들에 봉건적 자치권을 주는 방향으로 통치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공국들은 중앙집권의 왕국보다는 더 넓은 사회적 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독일 연방공화국의 지방자치제의 뿌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한 국가의 사회소통정책에서 작용하고 있는 규모의

정치학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자치의 독일 정치문화를 지원해주었던 것은 또한 당대 계몽주의 인문학 전통이었다. 여기서 당대 독일 귀족들과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상호 지원하는 일종의 은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대 독일의 인문학이 역사적 발전과 역사 철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독일사회의 발전과 인간의 자유 등에 대한 철학적, 학문적 근거를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 작업의 결과는 다시 당시 군주와 귀족들의 통치에 효과적인 조언을 주는 통치의 실제적 기술로 작용했다. 군주들의 계몽주의 인문학에 대한 후원은 이런 맥락에서 지속되었고, 그들의 인문정책 역시 권력과 지식의 이런 동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Brady Bowman/Klaus Vieweg 2006, 2003)

## ② 예술과 문화, 자연과 과학의 연관성을 찾는 작업

독일 계몽주의 사회는 자연과학과 학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기였다. 이것은 한편으로 시대의 흐름이기도 했지만, 18세기 독일사회에서는 무엇보다 궁정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능했다. 나아가 예술과 문화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특징적인 것은 예술과 문화에 대한 궁정과 군주의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자연과학과 학문에 대한 지원과 병행해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도 독일의 귀족과 계몽주의 시민계급의 은밀한 협력과 공생의 관계를 찾아 볼 수 있다. 독일의 많은 군주들은 이를 통해 당대 독일사회의 신흥 여론 주도층이었던 지식인, 자연과학자 및 예술가들과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정치에 중립적인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시민계급의 지식인과 예술가를 통해 자연에 대한 시각과 자연철학은 당시 막 생겨나고 있었던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된다.(Sabine Schimma/Joseph Vogl 2009) 이로써 독일 계몽주의 사회는 이웃 유럽국과는 달리 자연이 예술과 문화를 연결하거나 자연과학과 예술이 결합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Reinhard Wegener 2004, Jonas Maatsch 2008) 자연과 예술 그리고 과학의 이러한 결합 문화는 학문적으로는 당대 독일대학의 학문적 문화를 통해 후원되었다. 이 시기 독일대학은 다양한 학문적 네트워크



가 가능할 뿐 아니라, 진보적이고 창의적 학문연구가 가능한 조직으로 기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신분적 독립 조직체로 형성된 독일 대학의 전통과 함께, 당대 독일의 여러 정부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대학과 협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Steffan Kublik 2009, Gerhard Müller 2006, Gerhard Müller/Klaus Ries/Paul Ziche 2001)

18세기 독일의 대학은 중세의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중세의 전통에 따르면 대학은 신분적인 독립체로 기능했다. 이때 대학 내의 의사 결정 구조는 자율적 프로세스에 의존하고 있어 신분적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내의 인사구조에 있어서는 새로운 혁신, 즉 능력 있는 신예 학자들을 정식 교수로 쉽게 초빙할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그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독일대학의 예를 바이마르의 공국의 예나 대학과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 베를린에 세워진 훔볼트대학을 들 수 있다.

예나대학은 중세대학의 전통적 학부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학부 외부에 존재하는 궁정 직속의 연구소들을 설립해서 혁신을 시도했다. 연구소들은 궁정의 개입을 통해 당시의 촉망받던 여러 신예 학자들을 신속하게 원외교수로 초빙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연구와 교육에서 첨단적 작업과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19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예나대학은 중세 신분대학의 성격을 철폐하고 대신 근대적 대학법을 도입하여 학문과 예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정부 하의 자치조직으로 변화된다. 이로써 대학은 정치적 독립신분의 지위는 상실했지만 정부와 법을 통해 정치적 보호를 받는 자치기관이 되는 근대 이후의 대학 모델이 탄생한 것이다. 이런 정치적 중립의 모델은 다른 독일대학에서도 급속히 수용되었고 결국 대학은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자유롭고 활발하게 학문적 논의를 이어가고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 정부와 대학의 이런 협력은 동시에 대학의 학문이 정부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핵심적 토대가 작용하게 되었다. (Gerhard Müller 2006)

프로이센의 훔볼트대학은 바이마르 공국의 인문정신에 영향을 받은 빌헬름 폰 훔볼트가 프로이센 정부의 명을 받고 세운 근대적 대학인데, 대학 교육과 학문의 연구가 자유로운 인문정신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당시 독일의 대학은 독일의 궁정 내지 정부들과 경쟁의 관계를 가지기는 했지만 점차로 협력과 소통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해당 국가의 발전과 정부의 정책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협력은 정부의 중요한 인문정책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③ 인간 중심의 문화, 역사와 자연과학의 중심인 인간

이 시기 독일사회의 모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간중심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 주장되는 휴머니즘 이념의 전통을 이어 받고 있지만 그 강조점에서 르네상스의 이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자 인간의 중심적 가치가 사회와 문화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당대 독일사회에서 인간 중심적 가치는 인간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점과 자연과학적 질서에도 인간의 질서가 반영된다는 인간 중심적 역사관이자 자연과학관이었다.(Stefan Blechschmidt 2009, Katja Regensburger/Temilo van Zantwijk 2005) 이것은 인간중심적 휴머니즘의 이념이 자연과 역사의 법칙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했다.

18세기 독일사회는 근대화의 핵심에 계몽주의 역사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의 발전에 대한 믿음과 사회의 진보에 대한 긍정이 그것이었다. 이것은 유럽의 계몽주의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공통적 시각이지만, 특히 독일 계몽주의에서 특이한 점은 그 역사의식이 인간학과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독일 계몽주의는 인간의 가치란 역사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고 역사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역사의 이런 상호작용은 인간의 다양한 사회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인간적 활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 볼 수 있었던 특별한 계몽주의 시각으로 자연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다. 당대 독일에서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실행되고 있었던 이유는 우선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 통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은 자연의 질서는 인간 사회의 질서에 대한 원칙적 답을 제공한다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했다. 인간 사회의 질서는 자연의 과학적 질서와 상응해야 한다는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시각이 계몽주의 자연관 내지 자연과학관에 기초되어 있었다. 이것은 독일의 각 정부들이 자신들의 통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자연과학의 연구를 지원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독일에서 자연과학의 연구에 대한 지원은 각 나라의 통치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 ④ 시민정신과 시민의식

18세기 독일사회가 근대적 시민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정신과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가능했다. 프랑스가 중앙집권적 전제절대군주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시민계급이 형성된 것과는 달리, 많은 군소군주국들에 의해 봉건적으로 통치되던 독일은 18세기까지 시민계급의 성장이 미미했다. 이런 상황에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독일은 봉건적 계급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변모한다. 이것은 일부의 계몽 군소군주들과 귀족들이 시민계급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귀족과 시민계급이 상호협력하면서 가능했다.(Marco Kreutzmann 2008, Hans-Werner Hahn/Dieter Hein 2005, Julia A. Schmidt-Funke 2005)

귀족계급에 영향을 미친 시민적 가치와 그것이 수용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귀족과 시민계급 간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그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고, 당시 엘리트 시민계급은 이런 공동체 의식을 시민적 가치로 정립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민계급과 귀족들은 동일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이라는 의식도 형성시킬 수 있었다. 귀족과 시민계급은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귀족들은 시민계급을 사회 발전의 동반자로, 시민계급은 귀족들을 사회 발전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시민계급과 귀족들은 이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 발전을 이끌고자 했다. 사회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인식은 나아가 두 계급이 공동으로 민중문화를 선도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의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 ⑤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 지원

18세기 독일사회가 창의사회로 발전하게 된 핵심적 요인 중 하나는 문화와 예술의 지원이 정부와 군주에 의해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데 있다. 또한 상류사회의 고급문화뿐만 아니라 다수 시민의 일상문화 내지 민중의 문화도 제도적으로 후원되고 장려되었다.(Stefan Blechschmidt/Andrea Heinz 2007) 바이마르 공국의 궁정처럼 이른바 ‘문예궁정’으로 인정받는 궁정들은 문화와 예술을 후원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들을 끌어들이거나 배출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Joachim Berger 2001, Marcus Ventzke 2002, 2004) 바이마르 궁정이 후원하거나 바이마르 궁정과 협력한 대표적 인사는 시인이자 자연과학자, 장관이자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괴테를 중심으로 해서 계몽주의 소설가 빌란트, 극작가 쉴러, 역사철학자 헤르더, 작가이자 프로이센 정부의 외교관인 빌헬름 폰 훔볼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예술과 문화계의 인사들이었으나 당대 독일 궁정의 정치와도 광범위하게 연관을 맺고 있었다는 점이 특이하며, 나아가 그들은 모두 시대의 인문정신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기도 했다. 그들을 통해 당시 독일사회에서 인문정신과 시대정신은 같은 맥락에 있게 되고, 문화와 예술은 현실 정치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게 된다. 즉 당시 독일사회의 문화와 예술의 인문학적 발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점은, 인문적 창의성도 시대의 정신이자 문화와 연결되어야 하며 긍정적 의미에서 정치적 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 독일에서 연극이 창조적 시민교육의 수단으로 추천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가능했고, 이것은 현재 독일사회의 문화정책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당시 독일의 대표적인 계몽주의 극작가이자 연극이론가인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은 연극이 시민들의 감정과 의식을 계몽하는 교육적 수단임을 주장했고, 이를 통해 이른바 ‘시민비극’과 새로운 희극의 정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의 연극 및 예술관은 독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었고 괴테, 쉴러와 같은 후배 예술가들과 많은 시민계급의 지식인들에 의해 독일문화와 예술의 핵심기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독일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전

개된, 독일적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주장인 ‘슈투름 운트 드랑’ 운동은 레싱의 예술관에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주장은 특히 독일의 많은 군소공국 궁정들에서 문화 및 인문정책의 일부로 수용된다. 이들 많은 군소공국들은 프랑스와 영국은 물론, 독일 내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 열강들에 대항하여 독일 문화권 내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이런 주장을 폭 넓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요컨대 당시 독일의 문화와 예술은 각국의 제도적 후원을 통해 일반 시민과 민중들까지 광범위하게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했고, 이들이 독일문화와 예술에 열광하게 만들었다. 이런 열정은 결과적으로 독일사회에서 시민적 창의성은 물론, 일반 민중문화의 창의성으로도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Johannes Grave/Hubert Locher/Reinhard Wegner 2007)

#### ⑥ 인문학과 경제 및 정치의 연관성

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의 독일사회에서 인문학이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적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와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시민계급이 경제 생산과 교역의 주도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론과 도덕적 근거를 제공했고, 사회의 경제적 생산과 분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자본의 투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Andreas Christoph 2012, Katharina Middell 2006) 즉 당시의 근대인문학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경제활동의 자유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경제활동은 인간의 자유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계급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지대와 소작에 따른 수입과 이자를 통해 부(Reichtum)를 유지하고 있었던 당대 독일 귀족들의 중세 봉건적 경제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주역으로 등장하고자 했다. 그 연장선에서 인문학은 정치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정치는 서서히 부상하는 당대 시장경제와 구조적인 연관 관계에 놓이게 되는 데, 이때 정치와 시장을 연결하는 고리를 인문학이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의 질서를 형성하고 자본과 노동을 연결하고 자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는 인문학과 연관을 맺기를 원했고, 인문학은 정치에 창의적인

시각과 논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다. 괴테와 바이마르공국, 프로이센의 발전에 끼친 독일계몽주의 철학과 학문의 발전은 그 대표적 예로 언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인문학이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요소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것은 인문학이 사회의 발전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예로 작용한다.

#### ⑦ 사회적 소통과 통합

당대 독일사회의 창의적 발전에 인문학이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회적 소통과 통합에서였다. 당대 인문학이 정책적으로 사회통합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문학 담론과 인문학을 통한 소통의 형식이 사회적 소통과 통합을 가능하게 했다.(Klaus Manger/Ute Pott 2006, Werner Greiling/Franziska Schulz 2010) 이때 인문학은 소수자 집단과 여성과 같은 사회의 비주류집단에 대한 학문적, 철학적, 문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인문학 담론의 초점에 두기도 했으며(Julia Di Bartolo 2008, Julia Frindte/Siegrid Westphal 2005), 다른 한편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근원에 대해 학문적, 문학적, 예술적 탐구를 수행함으로써(Nicole Grochowina 2009)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인문학의 통합적, 총체적 성격이 약화되고 동시에 분과학문의 길을 가게 되면서 서서히 쇠퇴하고, 여타의 다른 학문분과들, 대표적으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및 공학 영역의 다양한 개별 학문분과들의 비약적 발전과 확장에 따라 더욱 약화되어 현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현대 인문학의 과도한 분과학문의 경향과 이에 따른 통합적 시각의 상실 내지 약화는 인문학의 사회 소통과 통합적 기능이 쇠퇴하는 데 본질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4.1.2. 20세기 초 독일사회의 실패와 인문학의 역할

20세기 초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한편으로 예술과 모더니즘 문화의 융성이라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정치적 혼란과 192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 허약

한 민주제도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어려움은 이후 독일에서 히틀러의 NS 정부가 들어서게 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게 만든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통의 부재, 사회통합 구조의 미비 등을 그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당대의 인문학은 사회적 소통과 통합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리라 판단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패한 원인은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인문학의 활력 상실 혹은 인문학의 통합적 시각의 상실은 당시 독일사회의 소통의 기반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사회의 구성원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고 불안의 내면 영역으로 도피하게 만들었다. 또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인문 정책 부재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모더니즘(바이마르와 베를린 모더니즘)과 독일 표현주의는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의 정책과는 유리된 채 예술가들 자체의 예술적 이상에 따라 형성되고 발전했던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문학적 시각에서 보면 이른바 1920년대 예술의 황금기(das Goldene Zeitalter der Kunst)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통합과 정치의 발전에는 미미한 역할을 하는 소수 엘리트적 현상에 그치고 말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 사회가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인문학과 인문정책이 항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바이마르 공화국의 예는 우리사회에서 체계적, 통합적 인문정책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하는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 4.1.3. 현재 독일사회 발전의 원동력과 인문학의 역할

현재 독일은 유럽에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이자 창의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로 평가되고 있다. 일단 본 연구가 주목하는 독일사회의 성공의 원인은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다.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부의 리더십과 상생의 정당정치
- 합리적인 시민조직과 노조의 활동

- 점진적 개혁을 통한 사회투자국가로 구조 전환
- 현장/직업에 밀착된 민주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 자발적 시민참여와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소통 구조의 형성
-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관점, 즉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철학적 관점의 동시적 적용과 실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정책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상과 삶의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의 성공 원인들은 현재 21세기 독일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 질서의 불안과 유럽경제의 반복적 위기, 그리고 EU의 정체성 위기 및 독일 다문화사회의 불안정, 독일을 비롯한 유럽 내 극우세력의 제도적 진입과 합법적 성장 등, 정치와 경제, 사회의 불안 요인들은 독일사회가 21세기 중반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게 하는 주요 쟁점들이다. 또한 가속되는 디지털 산업과 문화,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 발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새로운 재편의 움직임 등도 독일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일종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때 21세기 인문학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간단히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인문학은 21세기의 새로운 과학기술의 시대에도 인간 중심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를 높이며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럴 때 독일은 물론 세계는 20세기 초반 서구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인문학은 사회 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미래의 인문정책은 인문학이 시대와 사회 변화의 방향을 미리 감지하고 이것을 선도하며 동시에 시대와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이 몰고 올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4.1.4. 독일 통일조약과 베를린 문화과학부의 인문·문화정책 자료

우리의 입장에서는 통일에 대비하는 인문정책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그 예로 1990년 8월 발효된 독일 통일조약과 통일 후의 베를린 시(市)정부 문화과학



부의 인문·문화정책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조약에서는 특히 문화, 교육, 학문과 연구 부문이 통일 후 인문정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자료의 형태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독일 통일조약

##### 〈제35조〉 문화

(1) 분단기간 중 양독일의 상이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문화는 독일민족의 지속적인 단일성 유지의 기초가 되었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유럽통합을 지향하는 독일의 국가적 통일과정에 있어 독자적이며 필요불가결한 기여를 하고 있다. 통일된 독일의 세계 속에서의 위치와 이미지는 그의 정치적인 비중과 경제적인 능력 이외에도 그의 문화국가로서의 의의에 좌우된다. 대외 문화정책은 동반자적인 공동 작업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를 우선목표로 한다.

(2)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문화적 재산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3) 문화적 임무수행과 자금 조달문제는 보장되어야 하며 기본법상의 관할권 분담에 따라 새로운 주들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서독 연방의 각 주와 똑같은 문화, 예술의 보호와 진흥의 의무를 지닌다.

(4) 지금까지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되던 문화시설과 기관은 그것이 위치한 주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기관에 이양된다. 연방정부를 통한 부분적 재정조달은 예외적인 경우에, 특히 베를린 주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5) 전후 사건들로 인해서 분산 소장된 프로이센 정부의 소장품들(현재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국가기밀문서보관소, 국립음악연구소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은 베를린으로 다시 집중 소장된다.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은 잠정적으로 이 업무를 위임받는다. 앞으로의 관리를 위해서도 프로이센 문화재단은 둘 수 있다.

(6) 문화기금은 문화, 예술 그리고 예술인 장려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계속 적용된다. 연방정부를 통한 부분적 자금조달은 기본법에 의한 관할권 분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후속 기관에 대해서는 제1조 1항에 언급된 주들의 편입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들의 문

화재단과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7) 분단의 결과로 발생한 동서독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연방은 과도기적으로 제3조에 언급된 지역 내에서의 문화적 사회시설 진흥을 위한 개별적 문화조치와 기관들의 재정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37조〉 교육

(1) 동독 내에서 취득되거나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학교 교육, 직업 교육 및 대학졸업 자격 또는 자격증은 제3조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 계속 유효하다. 제3조에 명시된 지역 또는 서베를린을 포함한 서독의 다른 주들 내에서 시행된 시험이나 취득한 자격증들은 동등하게 취급되며,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등한 권한을 부여 받는다. 동등가치 인정은 신청에 의해 해당관청의 확인으로 결정된다. 시험 또는 자격증 동등인정에 관해서는 연방정부와 유럽공동체의 법률적인 규정 및 조약 내에서의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국가로부터 취득되었거나 국가가 공인하는 또는 수여받은 대학 직업 명칭과 등급 및 학위의 사용 권리는 계속 유효하다.

(2) 교원시험(순위고사)에는 문교장관 회의에서 통용되는 절차가 적용된다. 문교장관 회의는 이에 상응하는 과도규정을 제정한다.

(3) 견습직 조직법과 전문직 조직법에 의한 시험합격증과 공인된 견습직의 졸업시험과 제도시험은 동등하게 취급된다.

(4) 제3조에 언급된 지역들 내에서의 학제 변경에 요청되는 규정들은 제1조에 언급된 주들에 의해 결정된다. 학위 인정을 위한 필요규정들은 문교장관 회의에서 합의된다. 상기 두 경우는 함부르크 협정과 문교장관 회의에서 추가 합의사항을 그 기초로 한다.

(5) 졸업 이전에 대학을 바꾸는 학생들은 졸업시험 규정에 관한 일반규정 (ABD) 제7조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고시 허가 적용의 규정에 의해 그 학점을 인정받는다.

(6) 동독의 기술, 전문학교 졸업증을 바탕으로 한 확인된 대학진학 자격은 1990년 5월 10일 문교장관 회의 결정과 그 부록 B에 의해 인정된다. 학교 및

대학졸업 후의 상급직업 교육을 위한 전문학교 졸업, 대학졸업의 인정과 관계된 기타 원칙과 절차는 문교장관 회의에 의해 마련된다.

#### 〈제38조〉 학문과 연구

(1) 제3조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 학문과 연구의 필수적 개혁은, 성과가 있는 기관은 보존한다는 방침 하에, 공공기관에 대한 학술심의회에의 감정서를 근거로 한다. 이 감정(鑑定)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는 바, 중간결과는 사전에 단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후속 규정들은 이 감정 업무를 가능케 하며,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의 학문과 연구가 독일연방공화국의 공동연구 구조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2) 편입 발효와 동시에 동독의 과학아카데미는 학회로서 연구단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구분된다. 동독의 과학아카데미 학회가 어떤 형식으로 존속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주(州) 법으로 결정한다. 연구단체와 기타 기관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제3조에 언급된 지역들의 기관으로서, 이들이 폐지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 단체와 기관에 대한 과도기적 재정 보조 조치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은 1991년도에 연방정부와 제1조에 언급된 주들로부터 마련된다.

(3) 연구협회와 기타 동독의 과학아카데미 기관 고용원들의 노사관계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각 기관을 이양 받는 주정부와 한시적 고용관계로서 지속된다. 본 조약 부록 1에 기록된 법률요건에 의해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노사관계를 해약시킬 수 있는 권리는 불변한다.

(4) 동독의 건축아카데미와 동독 농업아카데미 및 식량 · 토지 · 삼림부 소속 기관들에는 제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이 적용된다.

(5)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교섭을 할 때, 기본법 제91조 b에 의거하여 교육계획 및 기관의 장려조치, 학문연구 추진이 지역성을 탈피하여 제3조에 언급된 지역까지 확대되도록 연방과 주정부 간의 협상을 조정하고 체결한다.

(6) 연방정부는 서독 연구기관에 의해 확정된 연구방법과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신속히 전(全) 연방에 적용되도록, 그리고 제3조에 명시된 지역 내 학자들과

학문기관이 현행 연구 장려 조치를 받도록 노력한다. 연구와 개발 장려 조치는 서독 내에서 그 시행기간이 종료되었을지라도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을 위하여 재개되어야 한다. 세금조치는 여기서 제외된다.

(7) 편입 발효와 동시에 동독의 연구심의회는 해체된다.

## ②베를린 문화과학부

베를린 시(市)정부가 시행하는 문화정책과 공공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자료는 통일 후 시행할 수 있는 인문 및 문화정책의 한 예를 보여준다.<sup>1)</sup> 이에 관한 자료 역시 한국의 통일과 연관되는 통합적 인문·문화정책의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기에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베를린의 문화 및 문화정책의 현상황 (요약)

○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현저한 예산절감이 달성되었다.

○ 그러나 경비절감을 위한 확실한 계획의 미비는 구조적인 변화를 어렵게 했고 결과적으로 문화정책적인 방향조종에 있어서 오류를 초래했다.

의결된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구속력 미비와 해당 협정의 취소는 예술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을 어렵게 한다.

예술 분야의 계획은 비교적 긴 기간을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1년 단위의 예산 결정과 부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예산감축은 자체적으로 비생산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체의 프로필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상응하는 예산추가부담을 통해서 보충되기 때문이다.

○ 단체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함에 있어서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예산을 건실화하는 동시에 균형 잡힌 문화풍경을 만들어내기에 역부족이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법형식 변화는 비록 단체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데

---

1) 이춘길 외: 민족통일성 회복을 위한 통일 이후 독일의 문화통합과정 연구<자료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S. 211-216 참고.

필요한 더 많은 자유를 위한 일차적인 전제를 창출하기는 하지만 단체들의 독립성 제고, 무대 공연에 적합한 임금체계의 형성, 부수적인 협정(근무협정)의 검토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현시점에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단체들이 자신들의 예술적인 프로필을 만들어내고,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의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개별 단체의 지평 내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도 포기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직 베를린의 예산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부담경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 정치권, 행정부서 및 단체들이 현재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태도는 베를린의 문화풍경을 형상화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문화적인 활동과 문화상품이 무의식적으로 재정정책적인 결정들에 의해서 규정된다.

행정부서는 내부지향적이기 때문에, 베를린의 문화풍경을 형성하는 데 내실 있는 제안을 하는 대신 예산절감계획을 행정조치로 변화시키는 일에 몰두한다.

자신의 책임 하에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채, 이러한 압력에 내맡겨진 단체들은 자주 자기방어적 혹은 경직되게 반응한다.

## 2) 베를린 문화풍경의 형상화를 위한 목표

○ 문화지원을 내실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베를린의 문화영역은 16개의 분야로 세분된다.(오페라하우스, 오페레타, 사설극장/오프씨어터, 아동극, 문예극, 문화교류, 박물관, 미술, 문학, 음악, 문서보관소/시대사, 도서관, 영화와 매체, 분야별 공통기관, 연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

○ 이에 관련된 질적인 토론은 베를린의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원칙 하에서 문화정책적인 핵심문제들에 답변을 제공해야만 한다.

○ 문화상품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문화영역의 관점에서 개별 단체의 과제를 정의하는, 문화정책적인 구조결정은 목표추구에 부합해야 한다. 그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결손해소, 예를 들면 현대무용의 확립

중복회피, 예를 들면 예술단체의 해체

프로필 특화, 예를 들면 주제적, 개념적 집중

부공연장의 문제와 같은 핵심과제들을 인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

기술과 행정과 같은 이차적인 과제에서 공동작업 이용

소재지와 소재지 집중의 검토, 예를 들면 작업장 통합

서비스 개선, 예를 들면 티켓 시스템의 통일

○ 정치권, 행정부서 및 단체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태도를 재조정하여 개선하는 것은 구조결정들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정치권은 당면한 예산절감의 강요에 직면하여 미래지향적인 문화구조를 위하여 장기적인, 최소한 중기적인 계획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 이에 상응하여 행정부서는 진취적이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치적인 목표와 예술적인 책임 사이에서 자신의 중간적인 입장을 수행해야만 한다.

단체들은 예술적인 경쟁을 유지하면서 협력을 통하여 문화의 전체 지형도 내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만 한다.

○ 미래의 조정모델에서 문화예산의 분배는 단체들과 프로젝트들의 주문과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산주문: 단체들과 프로젝트들이 예산을 얼마나 요구하는가?

예산의 최대한도 설정: 1) 문화를 위한 예산정책적인 가용공간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2) 어떤 문화정책적인 구조결정이 필요한가?

실적분석(어떤 단체들과 프로젝트들이 특별한 실적을 기초로 우선권을 가지는가?) + 필요분석(어떤 단체들과 프로젝트들이 문화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만 하는가?)

예산제공: 문화예산이 분야별, 단체별,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예산정책적인 제한을 고려하면서 지원수단들을 투명하게 조정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단계: 예산안 + 분야별 프로필

2단계: 문화상품에 대한 투명성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가진 프로필 규정

변신가능성의 제고

목적지향적인 자금 투입

예산통제의 개선

3단계: 목적지향적인 지원과 구조적인 절감

## 4.2. 프랑스사회 모델에서 인문학의 역할

### 4.2.1. 프랑스의 문화와 정치

우리는 국가 주도의 문화정책을 펼쳐온 프랑스의 독특한 문화 전통과 세계화 과정에서 프랑스인이 문화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프랑스 사회 문화정책 모델 탐구 과정 속에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 인문정책의 발전, 한국 문화발전, 한국적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실천을 위하여, 또 세계화 시대 한국인의 정체성 수호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그 실천적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 ① 문화는 정치다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둘러싼 국제 분쟁이 보여주듯이, 문화는 매우 정치적인 영역이라 말할 수 있다. 프랑스는 문화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프랑스는 자국 고유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긴 최초의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정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문화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프랑스가 자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드높이고, 자국 문화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② 프랑스 문화정책의 전통

일찍이 역사가 조르주 뒤비는 “프랑스를 위대한 문화의 나라로 만든 것은 강력한 군주국가 덕분”이라 말하였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인 프랑스는 국가가 문예학술을 옹호, 보호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역대 통치자들은, 문화를 통해 국민의 평화와 화합을 달성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예술 창작을 후원하면 이것이 국부의 원천이 된다고 믿었다. 모든 프랑스 국가권력자들은 왕정, 공화정을 막론하고 이러한 문화의 ‘힘과 가치’를 믿고 열정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예술창작을 후원했다. 프랑스의 정치인은,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것이 국부의 원천이며, 문화강대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후세에 길이 남을 찬란한 정치적 업적을 남기길 원했던 역대 통치자들의 지극한 노력에 힘입어, 프랑스의 문화 경쟁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 4.2.2. 16-19세기 프랑스 국가 주도의 문화예술 정책의 전통

우리는 본 연구에서, 1530년 왕립학술원을 건립하여 국왕의 지원을 받은 학자와 예술가가 창작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프랑스 문화기틀을 다진 프랑수아 1세, 1634년 불멸의 지성인들로 구성된 아카데미 프랑세즈 Académie Française를 세워 지극한 자국어 사랑으로 프랑스어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린 재상 리슐리외 추기경과 루이 13세, 그리고 재무 장관 콜베르 Colbert와 함께 뛰어난 인재들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국가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어 화려한 문화예술의 황금기를 꽃피운 루이 14세의 업적을 연대기 순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찍이 콜베르가 주창한 “문화의 경제화”가 국익창출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다시 말해 창의적인 문학 예술가들이 창조한 문화예술이 얼마나 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프랑스산은 고급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프랑스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격상시켜 세계인의 뇌리 속에 문화강국 프랑스를 얼마나 또렷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지, 자국어 사랑과 관리가 자국민의 정체성 수호와 사회 통합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각도로 탐구하고자 한다.



#### ① 프랑스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프랑수아 1세

프랑수아 1세는 학문과 예술을 후원한 첫 군주이다. 그는 1530년 콜레주 드 프랑스의 전신인, 왕립 학술원을 세웠다. 국왕과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학자와 예술가들은 연구와 창작에 몰두할 수 있었다.

#### ② 프랑수아 1세의 문화진흥책, 프랑스어 사랑

프랑수아 1세의 최고 업적은 언어정책이다. 그는 자국어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1539년 빌레르 코트레 칙령이 선포한다. 빌레르 코트레 칙령은 법률문서와 공증인이 작성한 모든 문서를 라틴어 대신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후 프랑스 국내 모든 출생, 사망신고는 프랑스어로 기록된다. 또 프랑수아 1세는 프랑스 역사연구의 토대확립을 위하여 고문서보관소를 설립하였다.

#### ③ 루이 13세의 문화정책, 아카데미 프랑세즈

루이 13세의 재상 리슐리외 추기경은, 프랑스어의 국제어로서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하여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를 설립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1634년 설립되어 35년 법인으로 인정받고 현재까지 존속한다. ‘불멸의 지성인’으로 불리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40명의 종신 회원이 되는 것은, 프랑스인에게 최고의 명예이다. 이 기관은 문학 국민대표 기관이다.

#### ④ 프랑스 문화의 기반 프랑스어

프랑스는 정치체제로 강력한 중앙 집권제 전통을 고수한다. 프랑스의 강력한 중앙 집권제는 프랑스어라는 문화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프랑스어는 프랑스 국민을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결집시킨다. 4세기 골 지방 골족의 언어, 라틴어가 발달한, 갈로·로랑어 혹은 로망어가 모체인, 프랑스어는 프랑스 수도권 지역의 방언인 썬이다. 중세까지 프랑스 지배계층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라틴어를 상급언어로 여겼지만 ‘라틴어에 대한 콤플렉스’는 중세이후, 점차 민족개념, 국가 개념이 생기면서 곧 해소된다.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은 시인

뒤벨레의 『프랑스어의 옹호와 선양』(1549)선언에 나타난다.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프랑스어는, 라틴어를 대신하여, 유럽대륙의 상급언어로 자리 잡는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불어가 더욱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로 발전하기 위하여 많은 공을 들인다. 수많은 프랑스어 수호 기관 중 최고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아카데미 프랑세즈이다.

#### ⑤ 프랑스어 수호 기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활약

1635년 리슐리외 추기경이 설립한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는 현재까지 존속한다. 프랑스의 ‘최고 국보’ 프랑스어를 수호하는 일은 일명 프랑스 학림원이라 불리는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담당한다. 주된 활동은 표준 문학용어를 확립하는 것이다. 아카데미시앵들은 프랑스어가 최초의 순수함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감시한다. 신조어가 생기면 면밀히 검토하여 포함시킬지 결정한다.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결정한 표준어를 전 국민이 따를 의무가 있다. 프랑스 국민은 아카데미에 대단한 경외심을 갖고 존중하며 그들의 결정을 따른다. 아카데미시앵은 ‘불멸의immortel’ 지성으로 불려진다. 프랑스 문학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들, 코르네유, 라신, 볼테르, 샤토브리앙, 위고, 르낭, 베르그송 등이 대부분 아카데미프랑세즈의 회원이었다. 아카데미시앵이라 불리는 회원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시인, 작가, 철학자, 의상 분야 전문가, 과학자 등등 각 분야의 권위자 4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종신형이다. 회원이 되는 일은 프랑스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이다. 이와 같은 전통으로 인해,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유럽 학술원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으며 최고의 명성을 자랑한다.

#### ⑥ 프랑스 문화정책의 아버지 콜베르

루이 14세는 최고의 문화후원자였다. 뛰어난 인재에게 연금과 생활비를 주고 창작을 독려하였으며, 국왕과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국왕의 후원에 힘입어 당대 고전주의 3대 대가들, 코르네이유, 라신느, 몰리에르가 등장하여 고전주의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1680년 국가는 기존

극단들을 통합하여, 최초의 근대 국립극장 “코메디 프랑세즈Comédie Française” 를 만들었다.

루이 14세의 문화정책은, 재무장관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 덕분에 만개한다. 불멸의 지성인,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인 콜베르는 행정적 역량도 뛰어나, 건축, 미술, 공예품에 대한 총감독직을 수행했다. 1666년 과학 연구를 위하여 왕립 과학아카데미를 창설했다. 또 1671년 왕립 건축 아카데미를 창설했다. 당대 거장 밑에서 학생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학교, 언어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썼다. 콜베르가 주창한 ‘문화의 경제화’, 즉 문화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덕분에, 오늘날 프랑스의 각종 고급 사치품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콜베르의 견해는 1980년대 미테랑 정부의 문화산업정책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⑦ 나폴레옹의 전리품이 가득한 루브르 박물관

1793년 혁명정부는 루브르궁을 박물관으로 개조하였다.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은 초기 왕실 소장품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나폴레옹 시대에 획기적으로 증대된다. 나폴레옹은 정복전쟁의 승리로 획득한 각종 전리품들로 루브르 박물관을 채웠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약탈한 예술품들, 1798년 이집트에 원정하여 수집한 이집트 문화재 등을 프랑스에 가져왔다. 나폴레옹이 수집한 이집트 문화재는 무려 55,000 여점이나 되었다. 나폴레옹의 꿈은 세계 최고의 박물관 건립하는 것이었다.

#### ⑧ 오스만 남작의 파리 도시계획

제2제정 파리 시장 오스만Haussmann 남작은, 황제 루이 나폴레옹 3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파리를 일신하는 대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 파리 시장 재임 17년 동안 수많은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대로를 건설하고 하수도를 정비하였으며 역과 병원을 설립하여 파리를 현대화시켰다. 파리지 현대화의 일환으로 건축가 샤를 가르니에가 세운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은 오늘날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 ⑨ 문화부와 만국 박람회

1870년 정부내각에 문학·과학·예술 담당 부서가 설치되었고 이 기관을 통하여 문화예술 정책이 펼쳐졌다. 1855~1900년까지 개최된 파리 만국 박람회Expo는, 프랑스 정부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게 한다.

### 4.2.3. 20세기 프랑스의 민주적 문화정책

프랑스 문화의 민주화 : 앙드레 말로와 자크 랑을 중심으로

우리는 앙드레 말로와 자크 랑의 문화정책으로 대변되는 현대 프랑스의 문화 민주화 정책 50년을 집중 탐구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이 영향력 있는 창의적 인재를 가진 문화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어떻게 ‘한국적 인문정책, 한국적 문화정책’을 펼치고 ‘한국적 토양에 맞는 문화 국토개발’을 이룰 것인지 성찰하고자 한다.

#### 4.2.3.1. 앙드레 말로의 문화정책 :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프랑스는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최초로 문화부를 창설한 문화대국이다. 드골De Gaulle의 제 3공화국 정부는, 1959년 세계 최초로 문화부를 창설하고 첫 문화부 장관에 『인간의 조건』으로 공쿠르 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 앙드레 말로André Georges Malraux를 임명한다. 말로는 국민 모두가 문화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문화 민주화démocratisation de la culture의 대표 사업으로, ‘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을 전국에 건설한다. “인류의 주요 문화작품을, 가능한 한 더 많은 프랑스인들이 향유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 앙드레 말로의 문화정책은 프랑스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통합과 사회 연대 실현의 발판이 된다. 초대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André Georges Malraux(1901-1978)는 드 골De Gaulle이 퇴진하는 1969년까지 제 5공화국 초기의 문화정책의 기틀을 마련한다. 프랑스 문화 정책은, 1959년 앙드레 말로가 문화부 장관이 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앙드레 말로는 문화 발전이, 민주주의 존립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며, 문화발전은 국민 통합, 사회 결속 역시 굳건하게 한다고 믿었다. 말로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예술을 접할 균등한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 ① 앙드레 말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프랑스는 해방 이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이른바 “영화로운 30년Les Trente Glorieuses”<sup>2)</sup>을 만끽한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경제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의 불안과 방황, 사회적 연대의식의 결여와 국가 의식 결여 등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등장했다. 이에 제 5공화국은 두 가지 목표, 프랑스 국민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기에 이르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부 창설이다. 드골 정부는 문화부를 창설하고 문화부 수장으로 ‘소신과 신념, 철학’을 가진 문인을 등용한다. 당시 미셸 드브레Michel Debré의 추천에 힘입어, 소설 『인간조건La Condition humaine』(1933)으로 콩쿠르 상Prix Goncourt을 수상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던 작가 앙드레 말로가 문화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sup>3)</sup> 제 2차 세계 대전 중 전선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드골과 말로는 서로 상호간 신뢰가 대단했다. 드골의 절대적 신임을 받은 말로는 드골 집권기 내내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그 결과 그가 구상한 문화정책을 소신껏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었다.<sup>4)</sup> 우리는 1959년에서 1969년까지 말로의 재임 기간 주요 문화업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59년 앙드레 말로André Georges Malraux는 역사적으로 처음 문화부안에 흠어져있던 문화정책 기구들을 집대성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문화부의 임무는 “가능한 한 많은 프랑스인들이 주요 인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말로는 많은 관중을 확보하면 문예작품의 창조정신을 촉진시

2) Cé doc, *L'Etat de la France*, Paris, La Dé couverte, 1994, p.94-95.

3) Marc Fumaroli, *L'Etat culturel, Essai sur une religion moderne*, Editions de Fallois, 1991, p.54-55.

4) Pierre Galante, *Malraux*, Plon, 1971, p.318.

킨다고 믿었으므로 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확대시키는데 열중했다. 그는 “인류의 주요작품, 무엇보다 프랑스 작품을,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프랑스인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예술작품의 창조를 활성화”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sup>5)</sup> 또 말로는 역사적으로 국민교육<sup>6</sup> *ducation nationale*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 교육 풍토에서 연극을 통하여 국민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② 문화부의 쇄신과 개혁, 프랑스 영화 진흥책

신설된 문화부는,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문화 민주화, 문화 창조와 보급이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부서에서, 특히 교육부에서 취급해온 문화 사업들을 양도받았다. 1959년 상반기 통상 상업부에서 영화기술, 교육부에서 예술과 문학, 건축, 국가 고문서, 청소년과 스포츠에 대한 문화활동사업 등을 인계받았다. 그러나 말로는 이 사업들 중 영화, 청소년과 스포츠 관련 공공교육 업무는 다른 부서로 다시 이관시켰다. 말로는 일과 업적에 대한 과욕을 경계했다.

특히 말로는 영화에 대하여 나름의 ‘철학’ 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영화가 오로지 상업적 성공만을 지향하거나 개인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국가가 양질의 영화제작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영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수입 체계를 손질했다. 영화 사업을 통상 산업부로 이관하고, 영화학 교수들을 지원하는 기금제도를 개혁하고 손질한 제도를 통하여 탁월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영화의 예술성만을 고집하여 시장성을 외면하지 않았다. 말로는 영화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자료원, 영화박물관, 영화예술교육을 위한 영화관을 개설했다.

문화부는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 안착시키면서 다른 여러 부서들을 신설하거나 개혁했다. 1961년 예술 창작부 *Service de la création artistique*, 1963년 문화 및 연구지원지역위원회 *Comité régional des Affaires culturelles* et du service des Etudes de la recherche, 1965년 22개 지역 *Régions*에 예술

---

5) Jean Caune, *La culture en Action*, PUF, 1992, p.114.

창작자문관les Conseilleurs é gionaux la cré ation artistique을 임명한다. 1967년 생존예술가 지원을 위한 현대국립예술 센터Centre nationale d'Art contemporain pour l'Aide aux artistes vivants, 건축국에는 건축창작부Service de la cré ation architecturale, 환경 연구소Institut de l'Environnement, 부와다르시 필름보관서Service des Archives du Film a Bois- d'Arcy, 1968년 문화활동센터들이 신설되었다.<sup>6)</sup> 이와 같은 기구들의 제도적 안착은 문화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 외에도 마르셀 란도우스키Marcel Landowski가 추진한 10개년 음악 분산화 정책, 앙드레 샤스텔André Chastel의 프랑스 예술자산 총목록사업, 필름보관소 설립, 등 수 많은 문화적 업적을 남겼다.

### ③ 국가 계획안에 포함된 문화 계획안

말로는 당시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국민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 연대의식 고취를 문화정책의 핵심과제라 생각하였다. 말로는 국가와 문화와 국민의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앙드레 말로는 5개년 국가 경제사회발전계획 속에 문화정책 계획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거듭했다. 당대에는 문화계획이 국가발전 계획 속에 삽입된 경우가 전무하여 말로의 발상은 그야말로 매우 신선하고 파격적이었다. 말로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어 제4차 국가 계획안에 문화시설 및 예술문화재 위원회를 창설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제5차 국가계획안에 문화계획안이 포함되어, 정부와 문화부의 계획안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실현되었다.

제4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1961-1965) 안에, 문화의 집과 관련된 문화활동계획을 실현할 발판이 마련되었고, 제5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안에 포함된 문화부 계획안, 문화시설확장을 위하여 국가가 직접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이제 문화는 명실 공히 국가의 최상의 목표가 되었다.

6) 임문영, 「앙드레 말로와 자크 랑의 문화정책 비교」,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37호, 2002, 한국프랑스학회, p.301.

#### ④ 앙드레 말로의 대외홍보정책

앙드레 말로는 프랑스의 해외 영토들이 하나 둘 독립하고 기존 식민지 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자, 문화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프랑스가 대외적으로 문화대국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주력했다. 앙드레 말로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프랑스가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남기 위하여, 오로지 프랑스가 “일종의 문화제국une sorte d'empire culturel”으로 거듭나는 길 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 ⑤ 말로의 문화의 집, 문화의 탈중앙화, 민주화

문화부 초대 장관 말로의 수많은 업적 중 가장 탁월한 야심작은 바로 “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이다. 당대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 지방과 도시 외곽지대는 그야말로 문화의 불모지 상태였다. 문제점을 인식한 말로는 각 지방 문화발전을 촉진시켜 지방 문화를 수도 파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즉 프랑스 모든 국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 분산화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의 집이 추진되었다. 프랑스 학림원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는 “문화의 집은 여러 형태의 문화 활동에 많은 사람들의 접근을 수월하게 해주는 사명을 가진 기관”이라고 정의한다. 말로는 1959~1969년까지, 각 지방에 “문화의 집”을 건립했다. 문화의 집은, 지방과 도시 외곽지대 주민들의 문화 활동, 만남과 교류의 장소, 문화 향유 공간, 인간과 예술이 만나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 많은 시민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말로는 인구 10만 정도의 도시마다 하나의 문화의 집을 건설하고 운영하고자 했다. 요컨대 문화의 집은 문화 소외지역인 지방을 위한 문화 분산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sup>7)</sup> 문화의 집은, 문화 민주화를 위한 “상징적 문화시설”로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문화의 집은 연극, 음악, 영화, 조형미술, 문학, 과학, 또는 인문학적 지식 분야”에서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게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다. 기존 설립 취지대로 “지방문화의 진

---

7) 그러나 지스카르 데스탱Giscard d'Estaing 대통령 시기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자유주의 개념이 도입되어, 말로의 문화정책은 퇴색한다. 다시 1981년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자 문화정책의 전환점을 맞는데 주역은 바로 자크 랑이다.



흥을 꾀하는 곳”으로 활용되어 문화 활동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sup>8)</sup> 이렇게 문화의 집은, 문화의 탈중앙화를 실현시켰다. 문화의 집을 통하여 ‘확산된’ 문화는 알제리 독립 전쟁 이후 분열된 프랑스인들을 다시 통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국민의식을 개혁하였으며 “20세기 성당”<sup>9)</sup>으로서 살아있는 문화를 접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파리와 지방간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였다. 국민 모두의 문화적 상상력을 고양시켜 문화의 창조, 보급, 참여를 활성화시켰다. 파리와 지방이 문화적으로 고르게 발전하자 그 결과 말로의 소망대로, 문화를 통하여 프랑스의 위용을 세계 속에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의 집은, 예술과 문화의 발전이 국가사회의 화평과 통합에 얼마나 크게 공헌할 수 있는지, 국가의 대외이미지 상승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 ⑥ 신중한 시험과 지방문화 활성화

그러나 단박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의욕이 앞서 문화의 집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곤란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7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우선 파리를 포함하여 전국에 16개 문화의 집을 창설하였고 문화의 지방 분산화정책을 단계별로 차례차례 실현시켜 나갔다.<sup>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도시에서만 문화의 집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문화의 집 활성화를 통해 지방문화 발전을 이룩한 도시들은, 르 아브르Le Havre, 부르즈Bourges, 캉Caen, 그로노블Grenoble, 토농Thonon, 아미앵Amiens, 랭스Reims, 크레테이Créteil, 보비뉴Bobigny이다.

#### ⑦ 문화대국을 향한 비전

앙드레 말로의 문화정책은, 드골주의, 국가 우선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임무

8) Marc Fumaroli, *L'Etat culturel, Essai sur une religion moderne*, Editions de Fallois, 1991, p.156-157.

9) 말로는 문화의 집이 20세기의 성당이 되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누누이 밝혀왔다. 임문영, 「앙드레 말로와 자크 랑의 문화정책 비교」,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37호, 2002, 한국프랑스학회, p.303.

10) Pierre Garante, p.127.

수행, 또 동시에 국민 통합과 사회 연대의식 강화, 국민의식 개혁에 역점을 두었다. 제 5공화국 문화정책은 문화의 집이란 꿈을 통하여 전 국민의 문화화, 즉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분산화 혹은 문화의 탈중앙화를 실현시켜 전후 불안정한 시기, 사회 통합을 이룩하고 동시에 통치자의 굳건한 위상을 정립하였다. 1966년 10월 27일, 말로는 의회에서 문화대국을 향한 자신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불과 25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닦는 예산이면, 그 예산으로 설립된 수많은 문화의 집에 힘입어, 프랑스는, 향후 10년 세계에서 문화가 가장 앞선 나라로 복귀할 것입니다.”<sup>11)</sup> 앙드레 말로는 프랑스 국민 모두가 문화의 창조, 문화의 확산, 문화 민주화의 혜택을 누리면 그 결과, 조국 프랑스가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최고의 문화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품었던 것이다.

#### ⑧ 빈약한 재정, 비용 분담

그러나 원대한 비전을 가진 말로가 드골 대통령의 남다른 신뢰 속에 국가 주도의 문화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말로의 비서실장 앙드레 홀로André Holleaux의 증언에 따르면, 드골의 신임과 별도로, 말로는 1996년 0.34%, 1967년 0.42%, 1968년 0.43%로 보잘 것 없는 예산만을 할당받았다.<sup>12)</sup> 그러나 말로는 적은 지원금으로 큰 변화의 돌풍을 불러 일으켰다. 그만큼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일했던 것이다.

문화의 집은 파리 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권리를 주기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건립과 유지비용은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였다.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공연예술을 위한 공연실, 전시실, 도서관 등 다목적 문화 시설을 건립하고 유지, 사용하려면 돈이 필요하였다. 문화의 집은,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며, 지방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확보한 예산이 턱없이 모자랐다.

11) 고봉만 외, 『프랑스 문화예술, 악의 꽃에서 샹넬 no.5까지』, 한길사, 2001, p.169.

12) 말로의 문화예산 확보는 실패와 낭패의 연속이었다. 그가 가장 큰 문화예산을 확보했을 때조차 0.43% 밖에 되지 않았다. Jean Michel Dijan, *La politique culturelle*, Le Monde Edition, 1997, p.71.

또 정부가 예산을 모두 책임지는 체계는 자칫 방만한 경영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은 점차 지방정부의 부담과 자체수입을 통한 충당, 후원회의 보조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문화의 집이 문화활동 센타로 개념이 바뀌자, 건축비용은 이전과 같이 정부와 지역사회가 반반씩 부담하되, 운영비는 국가가 3분의 1, 지역사회가 나머지 3분의 2를 부담했다.<sup>13)</sup> 1970년부터는 각 지역에 맞는 독자 장르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노력했다. 1980년대에는 지역사회의 건립비와 운영비 부담이 더욱 늘어났다.

#### ⑨ 문화의 집 문제점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화의 집은, 앙드레 말로가 문화부장관에서 물러나자 퇴조하기 시작했다. 문화의 집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본래 문화의 집의 사명은, 전통 문화의 보존과 새 문화의 창조이다. 무엇보다 주지의 사실대로, 파리와 지방 간 문화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치인의 문화 관여, 문화축매 운동가의 빈약한 역할, 저조한 활동계획, 획일적인 이용시간대 집중의 문제, 문화의 집 원장의 능력과 역량 부족문제, 타 기관과의 협력실패 문제, 시설 부족, 예산 부족, 관객의 관심과 호응부족 문제 등등으로 그만 퇴락의 길을 걷게 된다.<sup>14)</sup> 그러나 수많은 난제들의 도출과 사업 정치에도 불구하고, 앙드레 말로의 문화의 집과 문화정책은 제 5공화국 기틀을 마련하고 문화 민주화, 프랑스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로의 꿈은 현대 프랑스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문화 대국으로 성장시키는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

#### ⑩ 문화의 집 정신의 계승

오늘날 문화의 집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문화, 교육, 상업, 스포츠시설 등이 통합된 통합시설 **Equipements intégrés** 이 차지하였다. 새로운 시설 안에 문화시설 외 다른 분야의 시설들, 즉 교육시설, 상업시설, 사회시설, 스포츠시설

13) 임문영, 「앙드레 말로와 자크 랑의 문화정책 비교」,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37호, 2002, 한국프랑스학회, p.304.

14) 임문영, p.303-304.

등이 통합되어 다목적 기능을 수행했다.<sup>15)</sup> 1973년, 말로의 문화의 집이 담당하던 역할을, 문화 창조 활동에 우선권과 혜택을 주는 “국민 무대scènes nationales”<sup>16)</sup>라는 지역 단위의 공공문화시설, 문화활동센타가 이어받게 된다. 이는 비영리 협회로서 예술의 다양성을 지향한다. 국민 무대는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보다, 예술 향수의 기회를 확산하는데 더 중점을 둔 문화 창조의 산실로 각광받고 있다.

#### ⑪ 말로법의 제정, 문화유산 보호

앙드레 말로의 또 다른 업적은 법령의 제정이다.<sup>17)</sup> 말로는 문화재보존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재정적 보조를 뒷받침하는 장기정책을 확립하였다. 또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구시가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 하였고 “보존 지역법, 일명 말로법을 만들어 문화재 보호조치를” 실행하였다.<sup>18)</sup> 국립매장문화재 발굴단을 만들어 역사적 건축물을 복원하고 사적지를 보호하고 고고학의 전문성을 높였다. 재미있는 점은, 특히 재산 상속세를 지불할 때, 예술품으로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작품 수집을 확대하고 전시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sup>19)</sup> 프랑스는, 오늘 날까지, 문화유산의 보존, 재평가에 대한 말로의 정신을 이어받고 계승하여 일관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 ⑫ 앙드레 말로의 문화정책 평가와 의의

앙드레 말로의 문화정책은 제5공화국 국가기틀을 마련하였고 드골의 정치적 위상을 확고하게 강화하였다. 앙드레 말로의 문화 민주화 정책은 프랑스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 결속, 국민 통합, 국민 정체성 정립, 즉 문화를 통한 국민 의식개혁의 이상적인 실례를 보여주었다. 앙드레 말로는

15) 임문영, p.304.

16) 임학순, 「프랑스 센느내셔널의 문화적 경영사례」, 『문화예술』, 제 4월호,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1997.

17) 고봉만 외, p.171.

18) 고봉만 외, p.171.

19) 고봉만 외, p.171.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한 모두를 위한 문화, 국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 문화의 길을 앞장서 개척한 문화의 선구자라고 평가 할 수 있다.

#### 4.2.3.2. 사회당 미테랑 정부의 문화부 장관 자크 랑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에 또 다른 ‘거인’ 이 존재한다. 그는 바로 자크 랑Jacques Lang이다. 드골 정부의 앙드레 말로의 문화정책이 문화 민주화에 크게 공헌하였다면, 사회당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집권기, 자크 랑이 1981년에서 1993년까지 11년간 문화부장관을 역임하며 펼친 문화정책 역시 문화의 평등을 지향하며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요컨대 말로는 수도 파리와 지방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 한 반면, 랑은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사이, 계층 간 불평등을 철폐하려 하였다.

##### ① 문화 대통령을 꿈꾼 미테랑

유럽과 프랑스의 절대군주들이 문화적 상징을 활용하여 군주의 권력을 과시했던 것처럼, 미테랑 대통령은 집권 14년 동안 대통령이 주도한 이른바 대역사Grands Travaux, 위대한 루브르 박물관 사업Grand Louvre 등 거대 건축 공사를 통하여, 자신의 화려한 정치적 업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국민의 지지와 애국심을 일깨우고자 했다. 그에게, 문화란 ‘권력을 위한 비밀 병기’ 였다. 미테랑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이루지 못한 사업을, 구상하고 온전히 실현한 유일무이한 대통령이다.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오르세 박물관, 현대화된 오페라 하우스 바스티유 오페라,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를 세워 기존 루브르를 일신하고 명실 공히 파리의 대표 상징물이 된 대 루브르 박물관, 세계 최고의 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 당대 세워진 건축물들의 명성과 위용은 과히 압도적이다.

문화부 장관 자크 랑Jack Lang은, 국민에게 문화대통령으로 각인되길 원했던 미테랑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한다. 자크 랑의 꿈은 향후 10년 프랑스를 세계최고의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주도로 수행된 이 거대 기획에 의해 설립된 건축물들은, 미테랑 대통령은 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옹호한 권력자임을 드러내는 정치적 임무, 창의적 프랑스 시민들을 양성하는 문화적 임무, 이중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치적 문화적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건축물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예술품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창의적인 프랑스 문화 창조자들, 수준 높은 문화 향유자들을 길러내는 모태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프랑스 문화 정책의 두 원리 :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

프랑스 문화를 도약시킨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안에는 놀랍게도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가 함께 공존하여 두 제도의 강점을 문화부흥의 촉진제로 적절히 사용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 문화정책에서, “프랑수아 1세에서 시작하여 루이13세와 루이14세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군주제적’ 원리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발전한 ‘공화제적’ 원리”<sup>20)</sup>가 함께 작동했다. 두 원리를 하나씩 풀어 설명하면, 첫째 문화정책의 군주제 원리는 요컨대 “문화를 통한 권력 드러내기”<sup>21)</sup>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치자는 문화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자신이 보유한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후광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때 문화는, 권력자 개인의 정치적 도구 역할을 한다. 반면 둘째, 공화제 원리는 정치인이 문화부문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군주제 원리와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문화를 권력자, 즉 정치집단의 특수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향유하는 대상”으로 이해한다.<sup>22)</sup> 이 때 문화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밀접하게 결합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서로 상충되는 두 원리가 어떠한 양상으로 제5공화국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안에 공존하는 것일까? 우리는 ‘문화를 통해 권력을 과시하려는’ 미테랑 대통령의 강력한 “군주제적 열정”과, 문화의 공유를 지향하는 사회당 정부의 “공화제 원리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프랑스 문화 황금기를 구가하였는지 탐구하고자 한다.<sup>23)</sup> 우선 미테랑 대통령

20) 송도영 외 2인, 『프랑스의 문화산업체계』, 지식마당, 2003, p.249-255.

21)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문화정책 논총』, 제 17호, 200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288.

22)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p.288.

이 주도한 이른바 대역사Grands Travaux와 대 루브르 박물관Grand Louvre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당 문화정책의 군주제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문화부 장관 자크 랑Jack Lang의 대표 정책, 도서 정가제Prix unique du livre와 음악축제Fête de la musique를 통하여 사회당 정부의 공화제 논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 ③ 군주제 원리, 문화는 왕권강화 기반

먼저 군주제 원리 고찰해 보면,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다른 어느 국가보다 강력하게 정치가 문화 속에 깊이 개입하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속해 왔다.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군주 “프랑수아 1세는 지금의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çaise의 기원이 되는 왕립학술원Collège des lecteurs du Royaume을 창설” 하여 “당대 저명한 학자와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 했다.<sup>24)</sup> 또한 그는 “왕립 인쇄소와 고문서보관소를 설립하여 프랑스어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sup>25)</sup>을 닦았다. 프랑수아 1세를 시발점으로, 군주의 권력과 문화의 긴밀한 관계는, 절대왕정이 정점에 달한 루이 13세와 루이14세에 이르러 더 강화된 양상을 나타낸다. 루이 13세가 1635년에 설립한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학과 예술 활동을 국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프랑스어가 품격있는 국제어로사용 되는데 혁혁한 공훈을 세운다. 루이 14세의 통치기간 동안, 궁정 자체가 예술인의 활동 공간으로 개방되면서 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된다. 루이 14세는 코메디 프랑세즈Comédie Française를 창설하여 연극을 국가의 공식 예술 분야로 승격시킨다. 더 나아가 절대왕정 시대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의 문화부에 해당되는 건축 예술 공예 총감 Surintendant des Bâtiments, Arts et manufactures 직을 신설한다.<sup>26)</sup> 역대

23) Claude Mollard, *Le 5e pouvoir: la culture et l'Etat de Marlaux a Lang*, Armand colin, Paris, 1999, p.214.

24)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p.289.

25)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p.289.

26) Jean-Michel Djian, p.55-56.

프랑스 절대 군주들은 왜 다른 부문이 아닌 문화부문 발전에 그토록 남다른 열정을 기울였을까? 발랑디에G. Balandier는 정치인류학적 관점에서, 권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물리력과 제도 외에 피치자의 심리에 작용하는 상징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리력 또는 적나라한 폭력 위에 성립한 권력은 늘 불안정하다. 논리적 근거에만 기초한 권력은 신뢰성을 창출하기 힘들다. 권력이란 적나라한 지배라든가, 합리적인 정당화를 통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례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의 전환, 이미지의 생산, 상징의 조작과 조직화를 통해서만 창출되고 유지되는 것이다.”<sup>27)</sup>

발랑디에는 정치는 곧 “연극정치Théâtre politique”<sup>28)</sup>라고 정의내리면서, 연극정치 안에는 권력자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상징기술이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연극정치에서 가장 빈번하게 강조되는 것은 영웅의 신화다... 놀라움, 행동, 성공은 영웅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연극의 세 법칙”<sup>29)</sup>이라고 주장한다. 발랑디에는 연극정치는 통치자를 ‘신격화시키는 작업’, 즉 영웅 신화를 필요로 한다는 시각을 지닌 것이다. 군주의 문화영역에의 정치적 개입은, “문화적 스펙타클Spectacles의 연출”을 통하여 통치자와 통치자의 권력에 대한 “영웅적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피치자들의 신뢰와 지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술Arts”로 이해할 수 있다.<sup>30)</sup>

다니엘 리비에르는 프랑수아 1세가 유럽 전역의 군주들에게 널리 수용된 이른바 “인문주의적 왕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평가한다.<sup>31)</sup> 인문주의적 왕권은, 도시, 궁정과 같은 공적 공간을 매개로 군주의 존재와 권력을 표상하는 일을 핵심 통치술로 활용한다. 르네상스의 군주들은, 그들의 모

---

27) Georges Balandier, *Le Pouvoir sur Scènes* Editions Balland, 1992, p.16.

28) Georges Balandier, p.17.

29) Georges Balandier, p.17.

30)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p.290-292.

31) 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최갑수 옮김, 까치, 1995, p.133.



텔 고대 그리스의 통치술에서 전수 받은 대로, 오페라, 취임식, 입성 의례, 건축물, 회화, 조각 등 예술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재현하고자 했다. 프랑스의 절대군주들 역시 예외 없이 문화와 권력의 새로운 결합양식을 보여준다. 엘리엇 J. H. Elliott의 관점처럼, 모든 유럽의 절대군주들이 추구한 통치 기술은, 문화적 상징물을 통한 권력 드러내기 기술이다.<sup>32)</sup>

#### ④ 공화제 원리, 문화는 국민의 것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문화정책의 공화제적 원리의 기원이다. 구체제 L'Ancien Régime를 무너뜨린 혁명정부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새로운 정치철학을 가지고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고자 했다. 혁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 왕권과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이 해체되었으므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체성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혁명정부의 문화정책이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위하여 추진된다. 혁명세력은, 국가의 모든 문화적 유산은 시민에게 속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문화란, 권력자 개인의 소유물로서 권력자의 능력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었다. 혁명정부는 국민이 문화 소유의 주체이기 때문에 문화의 향유 역시 국민 전체가 누려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프랑스 행정구역 개편 법률인, 1970년 1월 24일, 25일에 제정된 법률들은 혁명정부에 의해 몰수되거나 수집된 구시대 문화유산들을 전국에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규정한다.”<sup>33)</sup> 혁명정부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혁명의회에 창설한 “문화재 위원회 Commission des Monuments”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였는데, 그 요지는 모든 프랑스인의 “문화재 향유를 위하여 83개 구마다 각각 문화재 보관소를 마련”해야 하며, 또 “문화재 보관소는 공교육 기관이 상주하는 대도시”이어야 한다

32) Elliott, J.H., Power and propaganda in the Spain of Philip IV, Sean Wilentz (ed.) Rites of Power : symbolism, ritual and politics since the Middle Ages, Univ.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985.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p.342.

33) Dominique Poulot, *Patrimoine et musées: L'institution de la culture*, Hachette, Paris, 2001, p.50.

는 것이다.<sup>34)</sup>

혁명정부는 문화재를 보관, 전시, 감상할 공간으로 박물관 제도를 설립하였다. 혁명가들에게 박물관이란, “국민의 공유물이자 향유물로서의 문화재”가 보관된 공간이며, “국민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상징들이 존재하는 장소로서 일종의 혁명 정치 문화 학교”였다.<sup>35)</sup> 이렇게 혁명가들은 문화와 정치를 다른 차원에서 결합시켰다. 문화는 더 이상 군주 개인의 권력연출을 위한 정치 수단이 아니며, 새 국가의 주체인 국민의 덕과 교양을 가르치는 정치 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편 혁명세력은 “시민 축제Fête civique를 발명”하여, 본질적으로 구체제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 속 문화를 뛰어넘어, 공화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의 창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축제의 공간을 마련했다.<sup>36)</sup> 우리는 프랑스 문화 정책의 주요 두 원리인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가 사회당 미테랑 정부의 문화정책 속에서 어떻게 함께 발현되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 ⑤ 68세대 자크 랑의 새로운 문화개념

자크 랑Jacques Lang은 68세대의 대표인물이다. 68혁명 당시 젊은이들은 문화는 사회혁명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5년 1월 사회주의자들은 “문화에 대한 국제회합Rencontres Internationales de la Culture”에서 “문화는 이념에 의해 정당화되고 일상생활을 통해 체험되는 집단적 표상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sup>37)</sup> 사회당 정부는 68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혁명정신에 입각하여 문화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1981년 5월 사회당이 집권하여 좌파 정권이 세워지자, 자크 랑은 문화의 특

---

34) Dominique Poulot, p.51.

35) 혁명세력 자코뱅파의 미술가 다비드는 “박물관이란... 중요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을,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 곳에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박물관은 이데올로기 전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다. Dominique Poulot, p.55.

36)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p.294.

37) Jacques Rigaud, *La Culture pour vivre*, Paris, Gallimard, 1975, p.189.

권을 철폐하고 문화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 68 혁명의 계승자들이 주창한 문화정책의 이념은, “문화는 특권적 소비자들의 시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문화는 보편적인 것이며, 그리고 “문화는 생활의 한 차원을 구성하는 것” 이라는 주장으로 요약된다.<sup>38)</sup> 자크 랑의 목표는, 가난으로 말미암은 문화 불평등 해소, 문화 공간의 확대를 통한 국민 참여 유도, 그리고 확대된 문화 참여에의 기회를 통한 국민의 문화 창조와 보급이었다.

#### ⑥ 문화의 영역 확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 철폐

1981년 5월 10일 사회당 미테랑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사회당의 대권 장악이 1958년 이후 23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을 매우 큰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당 정부의 집권은 프랑스 정당 정치사 뿐 아니라 프랑스 문화정책 역사에서도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몰라르C. Mollard는 “좌파 문화Culture de gauche”, “문화 사회주의Socialisme culturel” 같은 용어에서도 사회당 문화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sup>39)</sup> 마리안느 롱플 나도Marie-Anne Ronfle Nadaud는 1980년대 “사회당의 프로젝트는 문화란 특권적 소비계층의 향유물...이 아닌바... 사회당의 문화정책은 문화와 창조의 확산을 위해 더 많은 프랑스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화행위의 영역을 새로이 정의 하고자 하는 의지”<sup>40)</sup>라고 사회당 문화정책의 본질을 설명한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은, 바로 문화개념의 확장과 문화 행위에서의 국민의 능동적 참여 고무라는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의 문화향유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들은 같은 국가 같은 국민 사이 문화적 차이, 문화 결정주의Dé terminisme culturel에 대하여 깊은 문제의식을 가졌다. 사회당 문화정책의 지지에는, 소수 엘리트 고급문화와 다수 대중문화사이의 차이, 계급별로 향유하는 문화가 서로 다르게 고착되는 것을 경계하는 건전한 시민정신이

38) 고봉만 외, p.173.

39) Claude Mollard, p.214.

40) Marie-Anne Ronfle Nadaud, *Cahiers franc ais: Culture et socié té*, La documentation franc aise, 1993, p. 44.

있다. 그러므로 사회당 정부는, 프랑스 사회에 만연한 계층별 차이와 구별의 문화를, 평등하고 차별 없는 화합과 통합의 문화로 바꾼다는 목표를 지향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프랑스 국민 개개인은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객체로부터 탈피하여 문화적 주체로 탈바꿈하였다. 몰라르Mollard의 분석처럼,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은, “첫째, 프랑스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둘째, 시민의 자유로운 문화적 표현과 의사소통을 고무시켜 사회적 결집을 촉발시키며, 셋째, 당파적 논리를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진 잠재적 문화 능력을 발휘하도록 고무시키는 정책으로 평가 할 수 있다.” 41)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문화부 장관 자크 랑은 1982년 7월 27일 유네스코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사회당이 지향하는 문화적 이념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문화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문화는 권력자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국민 각자는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우리는 문화를 독식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소유주는 특정한 계급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나아가 문화는 수도를 포함, 도시의 것도 아닙니다. 한 국가의 모든 지역들이 문화발전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주류 예술과 주류 예술,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 간의 위계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42)

사회당 정부는 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별을 없애고, 만화, 패션, 대중음악, 비디오, 서커스, 요리 등의 대중문화분야도, 오페라, 문학, 고전음악 같은 고급문화분야와 동일하게 문화부의 지원을 받게 하였다.

자크 랑의 문화 민주화 정책은, 지금까지 문화로 간주하지 않은 문화 예술 분야를 문화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궁극적으로 문화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했다. 자크 랑은 보다 많은 국민이 직접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

---

41) Claude Mollard, p.291.

42) Philippe Poirrier, *Les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 p.394-395.

영역 확대를 실시했던 것이다. 랑의 문화 확대 업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음악분야에서, ‘부르즈Bourges의 봄의 제전’ , ‘록의 삼부회’ , ‘범음악제’ 등과 같은 음악행사들을 음악의 다양한 한 장르로 인정받도록 하였다.<sup>43)</sup> 랑의 문화부는, 매스 미디어와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무명으로 남아있던 음악그룹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작품 보급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프리카 음악들도 랑의 ‘발굴 작업’ 수혜를 입고 새로이 재조명되었다. 둘째, 랑은 한 때 각광받던 서커스가 사양길에 접어들자 이를 부활시킬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1981년 서커스현대화기금의 혜택을 확대하고 1984년 샤롱 쉬르 마른느Chalon-sur-Marne에 국립서커스센터Centre National des Arts du Cirque를 창립하고, 국립서커스예술협회Associaton Nationale des Arts du Cirque를 창립하여 서커스에 새 활기를 불어넣었다.”<sup>44)</sup> 셋째, “패션la mode, 사진, 인형극, 만화, 요리예술 등”<sup>45)</sup>을 예술로 인정하여 위상을 격상시키고 활성화 시켰다.

그뿐 아니라 당대 젊은 층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통 문화영역에서 소외, 혹은 제외되었던, 샹송, 민요, 재즈, 락음악, 장식미술, 모드, 광고, 디자인 역시 문화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문화 국립 샹송센타Centre national de la chanson를 창설하고 센타 안에 대소형 공연실들을 마련하여 대중음악 문화의 꽃을 만개시켰다. 랑은 때로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케스트라에 재즈를 삽입하고, 박물관에 사진을 전시하게 하고 루브르 박물관에 패션, 만화, 광고 관련 작품을 전시하게 하여, 장르의 벽을 허물었고 보다 많은 대중을 끌어들이며 문화 향유자의 폭을 넓혔다.

이와 같이 자크 랑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잊혀져가는 문화 활동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으며, 문화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문화의 장을 널리 확대하였다. 그래서 자크 랑은 “가능한 것을 꿈꾸는 이상주의자un utopiste du possible” 라는 별칭을 얻었다.<sup>46)</sup> 그러나

---

43) 임문영, p.305.

44) 임문영, p.306.

45) 임문영, p.306.

46) 임문영, p.306.

이상주의자 자크 랑의 ‘대중적인 문화정책’은 역풍을 만났다. 특히 우파의 비판과 거센 반대에 직면하였는데, 자크 보멜Jacques Baumel의 경우 랑에게 “퇴폐적인 미학자들과 생각 없는 젊은이들에게 갈채 받는 전대미문의 문화파괴자”<sup>47)</sup>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자크 랑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난관을 뛰어넘어 랑이 이룩한 문화 민주화 정책의 업적은 문화선진국 프랑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 ⑦ 중앙정부 예산의 증대

푸아리에P. Poirrier의 평가처럼, 미테랑 정부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문화부문에 개입하여 문화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면서 프랑스 문화지평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sup>48)</sup> 또 미테랑 정부의 문화 정책을 통하여, 대내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적 통합력이 증진되었으며, 대외적으로 프랑스 문화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자크 랑은 선임 장관들, 앙드레 말로와 자크 뒤아멜의 정책들을 임의대로 중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을 계승하고 대신 많은 개혁을 시도했다. 이러한 면모는 그가 개인의 명예와 이익보다 국가의 명예와 국익을 더 중요시한 인물을 알게 한다. 1981년 이래 주요 문화 사업들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재정이 요구되었다. 커뮤니케이션, 불어권사업, 프랑스 혁명 200주년기념사업, 거대 건축사업 등 문화부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자크 랑의 가장 큰 공로 중 하나는 바로 문화예산의 증가이다. 자크 랑은 정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산증액이 필수적임을 절감하고 문화부 예산을 1993년 총 국가예산의 1%까지 끌어올렸다. 1991년 문화예산은 1억 4천 프랑이었는데, 거대 건축사업을 포함하면 120억 프랑(당시 약 1조7천억원)이었다.<sup>49)</sup> 문화예산의 증액 덕분에 연극단체가 200개에서 600개로 3배 증가했으며, 박물관의 수도 1200개에 달하게 되었다.<sup>50)</sup> 무엇보다 국가와 지역이 공동 창설한 FRAM (Fonds

47) *Le Monde*, 16-17 Juillet, 1989.

48) Philippe Poirrier, *Les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 La Documentation franc aise, Paris, 2002, p.377.

49) 한국일보, 1992년 1월 25일자

ré gionaux d'Aquisition), FRAC (Fonds ré gionaux d'Art contemporain), FIACRE (Fonds d'Incitation a la cré ation) 공공기금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프랑스 예술의 창조, 보급, 감독, 관리, 경영은 어느 때 보다 충실하게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sup>51)</sup>

교육기관 역시 확대된 예산의 혜택과 수혜를 입게 되었다. 음악학교, 문화재학교Ecole nationale du patrimoine, 루브르학교가 설립되었다.<sup>52)</sup> 무엇보다 학교예술교육의 심화가 이루어 졌다. 대학입학시험인 바칼로레아 준비생 특별지도반이 100여개 이상 운영되었고 700여 문화반Classes culturelles이 개설되었다. 콜레쥬 드 시네마Collè ge de ciné ma 에는 12만 명의 학생에게 15,000명의 교사들이 영화교육을 담당했다.<sup>53)</sup>

⑧ 대건축 역사 : 대역사Grands Travaux를 통한 권력의 연출, 인재의 등용

1980년대 미테랑 정부의 문화부 장관 자크 랑은, 국민에게 문화대통령으로 각인되길 원했던 미테랑 대통령의 희망을 실현시켰다. 문화 민주화 정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크 랑은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문화부 예산을 1993년 총 국가예산의 1%까지 끌어올렸다. 전체 국가예산중 1%의 문화예산을 확보한 덕분에 문화 분산화 정책, 불어권 사업, 프랑스 혁명 200주년 사업, 그리고 대건축사업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80년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문화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1981년 5월 10일 프랑스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 일어났다. 1958년 이후 23년 만에 사회당 후보가 선거에 승리하고 미테랑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문화대통령을 꿈꾸는 그는 취임식부터 남달랐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을 팡테옹Panthé on에서 거행하여 이 역사적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최대로 활용하였다. 하명복의 평가처럼, 미테랑의 팡테옹 취임식은 “좌파의 정치적 승리를 미학적 방법으로 재현하고 좌파 정부를 공화주의와 애국주의의

---

50) 임문영, p.306.

51) 임문영, p.306.

52) 임문영, p.307.

53) 임문영, p.307.

전통 속에서 가시화함으로써 관객 국민의 가슴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지지와 정당성을 창출”<sup>54)</sup>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테랑은 늘 당대 “가장 큰 문화적 소양을 갖춘 정치인”<sup>55)</sup>으로 인정받기를 또, “교양 있는 정치인”<sup>56)</sup>으로 평가받기를 소망했다. 그러므로 그의 취임식 장소 선택은 그가 얼마나 문화를 통한 권력의 표상행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미테랑에게 문화는, “권력을 위한 비밀병기L'arme secrète”<sup>57)</sup>였다. 드골C. de Gaulle, 폼피두G. Pompidou, 지스카르 데스탱V. Giscard d'Estaing, 국민의 신임이 두터웠던 역대 전임 대통령들이 구상하였지만, 끝내 온전히 실행에 옮기지 못한 대역사Grands Travaux라 불리는 거대한 문화기획을 구상하고 실현한 유일한 대통령은 미테랑뿐이다.<sup>58)</sup> 그가 이룩한 대역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문학과 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건축 공사라는 점이다. 먼저 대역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54) 하상복, 「뽕떼옹과 상징정치」, 『한국 정치학회보』, 제39집1호, 한국정치학회, 2005, p.50.

55) Jacques Rigaud, *L'Exception culturelle : culture et pouvoirs sous la Ve Ré publique*, Bernard Grasset, Paris, 1995, p.102.

56) Philippe Poirrier, *L'Etat et la culture en France au xxe siècle*, Le Livre de poche, Paris, 2000, p.177.

57) Jean-Michel Dijan, p.84.

58)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p.295.



건축물	건축가	비용	개관년도
Musé e d'Orsay 오르세 박물관	Gae Aulenti	13억 프랑	1986
Parc de la Villette 빌레트 공원	Bernard Tshumi	13억 프랑	1986
Musé e des Sciences, des techniques et des industries 과학 기술 공학 박물관	Adrien Fainsiber	54억 프랑	1986
Instituit du monde arabe 아랍세계 연구소	Jean Nouvel	4억 2천만 프랑	1987
Opé ra Bastille 바스티유 오페라	Carlos Ott	28억 프랑	1989
Arche de La Dé fense 라데팡스 신개선문	Paul Andreu, Otto von Spreckelsen	37억 프랑	1989
Minist è re des Finances de Bercy 베르시 재무부	Christian de Portzamparc	37억 프랑	1989
Cité de la Musique 음악의 도시 음악당	Paul Chemetov, Borja Huidobro	11억 프랑	1994
Musé um d'histoire naturelle, Grande galerie 자연사 박물관, 위대한 갤러리	Paul Chemetov, Borja Huidobro	10억 프랑	1994
Grand Louvre 대 루브르 박물관	Ieoh Pei	57억 프랑	1995
Biblioth è que nationale de France 프랑스 국립도서관	Dominique Perrault	78억 프랑	1997

이름만 들어도 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모두 미테랑 집권기에 대통령 주도로 이룩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울 뿐이다. 이 대역사에 대한 구상은 1982년 3월8일 “대규모 건축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대통령 성명서 Communiqué de la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sur les grandes opérations d'architecture et d'urbanisme”<sup>59)</sup>를 통하여 최초로 모습을 드러

59)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p.296.

낸다. 성명서의 전문은 “공화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내년 중 시행될 문화 공간들의 특성과 장소에 관한 연구가 지난 수개월 전부터 이루어졌다. 이 거대 기획은 프랑스 건축의 부흥을 위한 계기가 될 것”<sup>60)</sup>이라고 명시하여, 대역사가 대통령 주도로 수행된 문화 사업임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미테랑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이 거대한 문화 사업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그를 보좌할 탁월한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른바 “4인 그룹 Groupe des quatre” 을 조직하였는데, 그들은 바로 “문화부 장관 자크 랑 Jack Lang, 도시 건설부 장관 로제 킬리오 Roger Quilliot, 대통령 비서관 폴 기말르 Paul Guimard, 총리비서실장 로베르 리옹 Robert Lion” 이다.<sup>61)</sup> 미테랑은 4인의 인재들과 협력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역사를 완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sup>62)</sup>

특히 미테랑은 자신이 스스로 구상하고 기획한 두 가지 대역사 사업, 루브르 박물관과 라데팡스 개선문 Arche de la Défense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리고 J. Rigaud에 따르면, 1190년 루브르궁을 건립한 중세 프랑스 군주, 필립 오귀스트 Philippe-Auguste에서 미테랑에 이르기까지, 루브르는 “언제나 권력의 장소”<sup>63)</sup> 였다. 그는 루브르가 순수한 문화적 공간이기 보다, 언제나 이중의 임무, 즉 문화적 임무와 정치적 임무가 수행되는 공간이었다고 강조한다. 사실 루브르는 루브르가 차지하는 특별한 위상을 생각할 때, “문화를 통한 권력의 상징적 재현을 위해”<sup>64)</sup> 가장 적합한 문화재였다. 리고 J. Rigaud는, 재무부를 이전하여 루브르를 순수한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고, 동시에 루브르 광장에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를 세움으로써 ‘대 루브르 박물관 Grand Louvre’ 건립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화룡점점을 찍은 미테랑의 참신한 발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60) Philippe Poirrier, *Les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 p.388.

61) Philippe Poirrier, *L'Etat et la culture en France au xxe siècle*, p.179.

62) Philippe Poirrier, *L'Etat et la culture en France au xxe siècle*, p.179.

63) Jacques Rigaud, *L'Exception culturelle : culture et pouvoirs sous la Ve République*, p.21.

64) Jacques Rigaud, *L'Exception culturelle : culture et pouvoirs sous la Ve République*, p.22.

“사실상, 바티칸을 제외하자면 또는... 비엔나의 호프부르크궁Hofburg을 제외하자면, 유럽과 전 세계 어디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의 삶과 예술의 삶이 밀접하고 견고하게 결합되었던 건축물을 찾을 수 있는가를 자문하게 된다... 건축가 페이의 구상에 따르는 근본적 개축사업을 통해 루브르를 순수한 박물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게 한다는 미테랑 대통령의 1981년 9월 결정은... 의미와 무게를 고려할 때... 이전의 권력자들이 구상한 기획과는 전혀 상이한 본질을 띠는 우리 역사의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sup>65)</sup>

리고의 평가처럼, 미테랑의 루브르박물관 개축사업은 궁극적으로 루브르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옹호하는 권력자임을 연출하고자 했던 프랑스 절대 군주들의 상징행위의 연장선에서 이해”<sup>66)</sup>될 수 있다. 특히 1983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기획안을 요청받은 중국계 미국 건축가 페이Ieoh Ming Pei는 유리와 철골로 구축된 이중 피라미드 기획안을 제출하며 피라미드를 선택한 이유를 건축물의 상징성 차원에서 설명한다.<sup>67)</sup> “우리 피라미드는... 상징적 입구의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하지만 왜 피라미드 형태이어야 하는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져 있는 이 피라미드는 구시대 건축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시대의 작품인 것이다.”<sup>68)</sup>

우리 피라미드 기획은 출발부터 수없이 많은 반대 여론과 반대 운동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테랑 대통령과 문화부 장관 랑은 반대 논리에 맞서 결국 페이의 유리피라미드 기획안을 통화시켰다.<sup>69)</sup> 미테랑과 랑이 포기할 수 없었던 유리 피라미드 기획안이 함축하는 건축물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져 있는 피라미드는 “구시대 건축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그들은 구시대와 단절된 “우리 시대의 작품”을 창조하고

65) Jacques Rigaud, *L'Exception culturelle : culture et pouvoirs sous la Ve Ré publique*, p.23.

66)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p.298.

67)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p.298.

68)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p.298.

69) Claude Mollard, p.267-269.

자 했던 페이지의 생각을 공유한 것이다. 그들은 피라미드 기획안이 합의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신념에 기초하여, 여론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쓸 수 있었다. 신념과 확신에 찬 그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기어이 기획안을 관철시켜 유리 피라미드의 현대적 감각을 더하여 루브르를 일신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미테랑 대통령과 사회당 정부는, 유리 피라미드의 건립을 통하여 루브르의 외관을 변모시키고 나아가 ‘과거와의 정치적 단절과 새로운 시작’이란 의미를 성공적으로 상징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⑨ 문화 분산화 정책, 기금조성과 활용

1960년대 극단 les Copiaus를 창단하고 연극의 대중화에 앞장선 자크 코포 Jacques Copeau 덕분에 지방연극단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sup>70)</sup> 1960년대에는 연극 중심으로 파리와 지방간 문화적 격차, 문화적 불공평이 해소된 것이다. 1983년 데페르 법Lois Defferre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많은 자율권을 보장하자 1980년대 문화 분산화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sup>71)</sup> 1977년 창설된 문화사업지역담당국DRAC Direction régionale d'Affaires culturelles은 지방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작촉진기금FIACRE Fonds d'incitation à la création을 조성하여 예술가와 문화사업안에 지원금을 보조하여 문화 분산화를 도모하고 지방 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sup>72)</sup> 지방 현대예술진흥재단FRAC Fonds régionaux d'Arts Contemporain은, 미술, 조각, 사진, 장식예술, 장인 예술 등의 현대예술을 진흥시키는 사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역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술작품 구입을 추진했다. 사실 예술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름을 알릴 기회를 주고 금전적 보상을 통하여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방법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반반씩 분담하여 작품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이렇게 구입된 작품 수는 1986년의 경우, 무려 회화 위주로 6000점이나 되었다.<sup>73)</sup> 구입된 작

70) Malcom Cook, *French Culture since 1945*, Longman, London, 1993, p.217-240.

71) 임문영, p.308.

72) 임문영, p.308.

품은 전시되었고 새로운 관객을 확보하여 지역 내 문화향유자의 폭을 넓혀나갔다. 이렇게 지방 현대예술진흥재단FRAC은 사회당이 주창한 문화 민주화를 실천했다. 1982년~1985년까지 중앙정부는 “매년 5억 프랑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였고 이 가운데 70%는 지역의 도서관, 음악학교, 시립예술학교에”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의 문화적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다.<sup>74)</sup>

#### ⑩ 문화부의 지자체에의 권한과 책임 이양

문화부 한 부서가 현실적으로 지방의 모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문화부는 이를 타개하는 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였다.<sup>75)</sup> 그러면 지방의 지역민 스스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고향 문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자크 랑의 문화 분산화 정책은, 법 제정, 제도정비 등을 통하여, 지자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성숙한 여건을 조성했다.

#### ⑪ 기관 활성화

자크 랑의 재임시절, 현대미술센타가 3개에서 14개로 증가하였고, 국립극장과 지방 극단공연이 활성화되어 기존 200개의 극장에서 600개로 증가하였다.<sup>76)</sup> 중앙정부는 1969년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부에 방계조직, 문화사업지역담당국DRAC을 증설하였다. 또한 미래 프랑스 문화를 꽃피울 꿈나무 예술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영화, 음악, 문화재 관리 등의 여러 장르별로 교육기관들을 창설했다. 예를 들면, 국립고등영화연구원IDEC, 2개의 국립고등음악원CNSM을 설립했다.<sup>77)</sup>

#### ⑫ 음악 축제와 도서정가제: 공화제적 측면

---

73) Yves Lé onard, Culture et Société , in *Cahiers franc ais*, n° 260, mars-avril, 1993, La Documentation Franc aise, p.48.

74) Yves Lé onard, p.47-48.

75) 임문영, p.308.

76) 고봉만 외, p.173-174.

77) 고봉만 외, p.174.

랑과 그의 참모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한 음악 축제Fête de la musique와 도서 정가제Prix unique du livre는 사회당 정부의 보편주의, 평등과 조화를 지향하는 문화 이념을 구체적으로 발현시킨 모범 사례들이므로 우리는 이 두 사례를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 ○ 음악축제, 프랑스 국민축제를 세계인의 축제로

1982년 자크 랑은 음악축제Fête de la musique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음악 축제는 연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 6월 21일로 정하였다. 축제가 시작되면, 프로, 아마추어 음악인들은 공연장, 거리 등에서 공연하며 크고 작은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과 어우러져 한바탕 축제를 즐긴다. 음악축제는 프랑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고 세계 각국 주요 도시들과 결연을 맺고 각국이 동시에 화려한 카니발에 동참한다.

먼저 음악 축제는, 문화개념의 확장과 시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축제이다. 이 음악 축제의 구상과 기획은, 음악에 대한 여론 조사의 예상 외 결과에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 자크 랑과 문화부 음악국장 모리스 플뢰레Maurice Fleuret는, “프랑스 국민의 37%가 악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평균 10%가 정기적인 연주 기회를 갖고 있다”<sup>78)</sup>는 뜻밖의 여론 조사를 접한다. 이에 자크 랑과 모리스 플뢰레는 프랑스 국민의 놀라운 문화적 잠재력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플뢰레는 수동적으로 청취되는 음악은 한계가 있으며, 개인의 능동적 음악 욕구가 표현되는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이라는 신념을 갖고, 일 년 중 하루 프로와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모두 모여 도로, 광장, 교회, 학교 운동장, 병원 뜰, 음악학교, 카페, 음악당 등 어느 곳이든지 음악연주의 기쁨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실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1982년 6월 21일 하지 제 1회 음악 축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sup>79)</sup> 이 음악 축제는 이제 프랑스 국경을 넘어, 세계인들이 즐기는 하지 음악 축제로 자리 매김하였다. 프랑스의 문화선진

78) Emmanuel de Waresqiel, *Dictionna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 de la France depuis 1959*, Larousse, Paris, 2001, p.285.

79)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p.301.

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선양시키는 주요 국제 행사로 지금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 도서 정가제, 소형 대형 서점의 공존 모색

도서 정가제를 살펴보면, 프랑스 출판계는 소위 ‘랑 법Loi Lang’ 이라 불리는 도서 가격에 대한 법률 제 81-766호에 의거하여 1982년1월1일부터 도서 정가제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 법은 도서 판매가의 고정과 명시화, 소매상에 의한 도서 최대 할인율의 제한, 도서 주문 서비스의 무료화, 할인율 조정의 규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sup>80)</sup> 기존 시행되던 “권장 가격제Ré gime du prix conseill é ” 는 서점과 출판사간 담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이 불공정 시장행위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하고 묵인하고 있었다.<sup>81)</sup> 급기야 1974년 대형 체인망을 갖춘 프낙FNAC이 일괄적으로 도서가격을 20%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거대서점과 경쟁이 불가능한 소형 서점들이 소멸 위기를 맞게 되었다. 사회당 정부는 사회적 이슈가 된 가격제를 고정 가격제로 전환하여 소형 전문 서점들이 대형서점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문화적 소수자’ 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sup>82)</sup> 그리고 소규모 전문서점들의 입지 강화를 통하여 대형 서점의 독점을 예방하고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도서 문화 발전의 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 ⑬ 오페라 반값 티켓으로 서민의 발길 유도

자크 랑의 문화 민주화 정책의 결실로 바스티유 오페라하우스가 세워졌다. 현대양식의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한 사실은 파리를 문화도시로 약진시킬 자산이 하나 더 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스티유 오페라 건립은 오페라의 개방이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랑은 오페라 티켓 가격을 기존 가격의 절반까지 내려, 반값 티켓으로 서민들의 발길을 유도하였다. “바스티유 오페

80) Philippe Poirrier, *Les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 p.381.

81)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p.301.

82) 김명섭, 「프랑스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프랑스와 미테랑의 집권기를 중심으로」, 『문화예정책총론』, 제 11호, 1999,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p.226.

라는 일부 가진 자들만의 향유물이던 예술의 주권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문화 혁명의 발상지가 되었다... 가르니에의 입장료는 최고 1,500프랑이었다. 바스티유 오페라는 그것을 절반 이하인 670프랑으로 내렸고 그 결과 서민들의 발길이 하나둘 이어졌다... 파리 국민 오페라는 오늘날 연간 8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자랑한다.”<sup>83)</sup>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자크 랑은, 공연예술 중 가장 귀족적인 오페라를 대중화시키고 오페라 예술인구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 ⑭ 프랑스 문화 지형의 진화, 문화주체로 거듭난 프랑스 국민

우리는 유리 피라미드가 세워져 현대화된 루브르 박물관, 라데팡스의 신 개선문, 국립도서관, 음악 축제와 도서 정가제, 등등 사회당 정부의 문화적 업적에서, 미테랑 대통령의 역대 그 어떤 통치자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문화적 열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테랑의 사회당 정부가 펼친 문화민주화 정책 덕분에 프랑스의 문화지형은 괄목할 만한 ‘진화’를 경험하였다. 수도 파리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도시들이, 건축 미학적으로 한 층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문화도시들로 거듭났다. 프랑스 국민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실천하면서, 문화의 수동적 향유자로 만족하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고 개혁하는 문화 주체로서 변화하였다. 프랑스의 눈부신 문화발전은, 도시 외형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 증진차원을 넘어, 프랑스 관광사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익 창출,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강화로 이어졌다. 사회당의 ‘대담하고 야심찬’ 프랑스식 문화정책 사업은, 당대 뿐 아니라 오늘 날 까지도 프랑스 문화를 모범적인 국제적 문화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낳았다.

#### ⑮ 탈중앙화 정책과 미제의 문제

몰라르의 관점처럼,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적 유대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소외에 맞서 싸우는” 평등 화합 지향적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84)</sup> 우리는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문화를 매개로 보편주의, 평

83) 「문화의 랜드마크를 찾아서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중에서, 『중앙일보』, 2000년 10월 7일

84) Claude Mollard, p.290.



등주의, 평화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한 이상적이고 선진적인 문화정책의 한 모델을 발견한다.

사회당이 주창한 문화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문화 분산화 정책과 문화 탈중앙화 정책이다. 하지만 프랑스 전 국토 안 문화민주주의의 완성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지금도 파리와 지방의 문화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며, 아직도 소수 특권층이 문화를 자신의 전유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을 특히 문화 분야에서 진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사회당의 문화 민주화 정책은, 문화 영역확대, 문화주체 확대, 대중의 문화 활동 참여를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문화에서 소외되고 문화에 관심을 끈, “비관객 non-public은 여전히 비관객”<sup>85)</sup>인 채 남아 그들을 관객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4.2.4. 프랑스 정부의 대외 문화 정책

##### ① 프랑스 정부의 대외문화 홍보 정책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62만 명을 잃었고 국토의 상당부분이 피해를 졌다... 인도차이나 전쟁(1946~54)은 패배로 끝났으며 탈식민지화의 움직임으로 인해 해외영토 대부분을 상실했다.”<sup>86)</sup> 그러나 프랑스는 실의에 빠지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외 문화정책을 개발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식민지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상실하자 정신적 종주국 역할을 자처하며 더욱 조직적으로 프랑스 문화예술을 세계 시장에 홍보하기 시작했다.

대외 문화 활동 부문 역시 앙드레 말로의 활약이 돋보인다. 앙드레 말로는 전 세계에 각종 전시회를 열어 프랑스의 탁월한 문화를 널리 알렸으며 과거의 영광을 복원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프랑스 산업과 경제는 “문화적 이미지와 문화적 부가가치”를 지니게 되었다.<sup>87)</sup>

---

85) 임문영, p.308.

86) 고봉만 외, p.177.

87) 고봉만 외, p.178.

## ② 프랑스의 문화적 포용력

프랑스 문화의 힘은 문화의 다양성에서 나온다. 프랑스 정부는 20세기 재능 있는 외국 화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이들을 프랑스 사람으로 귀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스페인 태생 피카소, 러시아인 샤갈, 네덜란드인 고흐, 체코인 쿤데 등 독보적인 예술가들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 ③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외교

1853년 외무부는 케 도르세Quai d'Orsay 로 이전하였다. 프랑스의 외교부 인사는 문인들을 발탁하여 외교관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하게 하는 독특한 전통이 있다. 예를 들면, 몽테뉴, 디드로, 볼테르, 등 뛰어난 철학자 문인들이 외교부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1945년 4월 13일 프랑스 정부는 외국과의 인적 교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교부 안에 대외적인 문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문화관계 총괄사무국DGRC Direction générale des relations culturelles”을 신설하였다.<sup>88)</sup> 당시 외무부 장관 조르주 비도 Georges Bidault는 “문화는 프랑스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sup>89)</sup>라고 말하여 문화외교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해외에 프랑스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기 위하여 대외 조직망을 더욱 전문화하였다.

## ④ 외무부 총예산의 35%를 문화에 투입하는 프랑스

오늘 날 프랑스는 “전 세계에 800명의 문화 및 기술 담당 참사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132개 문화원과 연구소가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외국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20개 국가에 25개 사회과학 인문과학 연구소가 분산 배치되어 있다. 또 47개 국가에 160개의 고고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문화사절단이 파견되어 있다.”<sup>90)</sup>

---

88) 고봉만 외, p.178.

89) 고봉만 외, p.179.

90) 고봉만 외, p.180.

프랑스어권의 보호와 확대를 위하여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부 총예산의 35%를 문화에 투입에 투입한다. 프랑스는 외무부와 문화부가 가장 긴밀하게 협조하는 유일무이한 국가일 것이다. 외무부는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 예를 들어 “1995년 문화교류 사업의 경우, 문화업무 지출액 총 53억 프랑으로, 외국 도서관에 80만권의 도서를 지원하고 15,000여권의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였다. 프랑스 작가, 편집인, 번역자들의 외국 파견은 연 300회 이뤄지고 같은 횃수 300회 외국 작가들이 초청받는다. 매년 20개 외국어로 300여종의 프랑스 저서가 출간된다. 외국에서 매년 1만여 건의 프랑스 문화행사가 집행된다.”<sup>91)</sup> 현재 120개국에서 프랑스와 과학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 장학생 사업으로는 소위 ‘프랑스통’ 지성인을 세계 각국에 양성하기 위하여 연간 1만7천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프랑스에 초청하고 있다. 연간 6천명의 프랑스 전문가들을 공동연구를 위해 외국에 파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문화의 해외 전파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4년 시청각 위원회 Conseil 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를 설립했다. 이 시청각 위원회는, 프랑스 국제 방송공사 RFI Radio-France International과 4개의 인공위성의 도움으로 첫째, 지구촌 100여 국가에 불어 방송을 송출하는 TV 5, 둘째, 1989년부터 불어권 중동, 아프리카 국가를 위하여 프랑스가 제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인공위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 국제채널 CFI Canal France International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불어권 지역을 아시아에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1991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프랑스 문화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sup>92)</sup>

##### ⑤ 프랑스 문화의 정체성 보호

1981년 사회당 미테랑의 프랑스 대외 문화정책은 프랑스 정체성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프랑스 정부는 무국적, 물개성의 미국 문화에 맞서, 프랑스 문

91) 고봉만 외, p.180.

92) 고봉만 외, p.181.

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982년 유엔 교육과 학 문화기구에서 자크 랑은 다음과 같이 연설한 바 있다. “문화란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우리는 오늘날 단 하나의 세계 문화가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수동적으로 문화적 침략을 감수해왔으며... 균일화되고 상투적인 음악에 침윤되어 왔다. 그 결과 민족 문화가 상실되고 전 세계적으로 강제된 획일적인 삶의 양식이 횡행하고 있다.”<sup>93)</sup> 이는 프랑스의 문화적 자결권을 강조한 연설문이다. 미국 문화의 패권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프랑스의 입장을 보여준다.

#### ⑥ 다자주의 추구

프랑스 정부는 자국 문화를 보호하는 일환으로 다자주의를 주장한다. 사회당 정부는 아랍연구소Institut du Monde Arabe, 라틴 아메리카의 집La Maison de l'Amérique Latine, 다문화간 대화모임Association Dialogue entre les Cultures, 등을 창설하여, 미국문화의 독점을 견제하고 각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문화적 침략’을 경계하면서도 프랑스 자국 문화만이 최고이며 세계의 중심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요컨대 프랑스 정부는 다자주의를 추구한다. 프랑스의 다자주의는 그들의 신념을 엿보게 한다. 그들은 지구촌 다양한 문화가 모두 각자의 목소리를 낼 때, 각 문화의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이 확보될 때, 중심 문화권의 특권적 군림이나 주변 문화권의 소외,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 간 갈등이 해소될 때,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⑦ 문화적 예외 논쟁

프랑스 대외 문화정책 중 “문화적 예외 논쟁exception culturelle” 일화가 유명하다.<sup>94)</sup> 프랑스는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가 세계화되고 있지만, 문화만큼은 예외라는 입장이다. 1993년 미국이 주도한 GATT 관세및 무역에 대한 일

93) 고봉만 외, p.184.

94) 고봉만 외, p.185.

반협정에서 예술가들이 영화시장개방 압력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자, 프랑스 정부는, 영화는 일반 상품이 아니라 “문화적인 예외” 라고 주장하며 자국 영화 보호를 위한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자유 무역 시장개방 압력 앞에서 영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정부의 자국 영화보호 결정은, 미국식 획일화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자주적인 대외 문화정책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프랑스 영화의 보호는, 프랑스어 문화권의 주체적인 문화정책의 본보기가 된다.

#### 4.2.5. 문화강국 프랑스의 문화정책에서 배울 점

프랑스 문화는 무엇이라 정의될 수 있을까? 프랑스 문화는 한마디로 통치자의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다. 문화가 얼마나 많은 국부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얼마나 많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격상시키는데 기여하는지 일찌감치 자각한 현명한 통치자들 덕분에 오늘날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 프랑스가 존재한다.

문화 강국을 꿈꾸는 역대 통치자와 그의 ‘완벽한 영혼의 파트너’ 문화부장관의 정책실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첫째, 문화정책 방향의 일관성이다. 다시 말해, 문화의 민주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다. 프랑스 정부는 우파이든 좌파이든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문화의 집 혹은 문화 분산화 정책을 통하여 일관되게 문화 민주주의를 추구해 왔다. 정당의 문화정책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국가의 문화정책의 근간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문화강국 프랑스의 굳건한 위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둘째, 문화는 투자이다. 문화는 투자에 좌우된다. 문화는 더욱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한다. 문화정책의 성패는 문화예산에 달려있다. 앙드레 말로는 원대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문화의 집 활성화가 한계에 봉착하였고 결국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 반면 자크 랑은 파리 거대건축사업에 천문학적인 문화예산을 할당하여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 건축, 미테랑 도서관 건립, 루브르 박물관 유리피라미드 건립, 라데팡스 신개선문 등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화자산을 창출하였다. 한편으로 사회당 미테랑의 파리 거대건축

사업은 다시 문화의 중앙 집중화 현상을 가속시켰다는 비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를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 가장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부상시켜 막대한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 문화 분산화 정책 실현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재정권과 책임을 지방에 이양할 수 있었던 것도 예산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셋째, 문화는 인사人事가 중요하다. 드골에게는 프랑스 자국 문화 발전에 대하여 원대한 비전을 가진 ‘문화 선구자’ 앙드레 말로가 있었다. 미테랑은 대역사에 앞서 가장 먼저 자크 랑을 포함한 인재 4인방을 등용했고 그들과 조율하며 역사를 완수했다. 그러므로 어떤 관리자, 혹 어떤 경영자를 임용, 평가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할 것인가가 문화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 문화 분야의 전문가 확보가, 예산확보만큼 중요하다.<sup>95)</sup>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탁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문화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품은 문화 전문가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자크 랑은 문화 분권化dé centralisation 정책, 탈중앙화 정책을 실시하기위하여 중앙 정부의 행정권을 분산하였다.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민간기업의 교차출자를 받는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축제, 전시회, 문화시설 운영, 관광사업 등 문화 사업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자크 랑의 목표처럼, 고른 문화국토 개발을 통한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문화 분야의 전문가만큼, 문화의 가치와 지자체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역량 있는 지역 행정가들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의 대중화, 문화의 민주화를 통한 국민 화합, 국민 행복 증진이다. 프랑스 문화정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문화 민주화를 지향해 왔다. 이를 위하여 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다기능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고, 지방 문화의 특색을 발굴, 보존, 발전시키고자 다각도로 노력했다. 또한 공화주의 원리를 기초로 프랑스 사회당이 펼친 1980년대 문화 정책은, 문화 개념의 확장과 시민의 능동적 참여로 요약된다. 프랑스 정부는 계층별로 향유하는 문화가 고착되는 것을 막고, 엘리

---

95) 임문영, p.311.

트 문화와 대중문화간의 차별, 주류 고급예술과 비주류 대중예술 간의 위계를 과감하게 철폐하였다.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대중문화까지 균등하게 돌아가게 했다. 이로써 문화의 민주화, 문화의 분산화, 문화의 대중화, 문화의 다양성 보호가 실현되었고 그 결과 국민 모두가 고루 행복한 유토피아를 함께 만들기 위하여 한 걸음 더 정진 할 수 있었다.

다섯째, 문화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이다. 자크 랑은 대외적으로 문화강국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세계 음악축제, 연극축제, 영화축제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1982년 6월21일 하지 음악축제 Fête de la musique는, 전문가, 프로 뿐 아니라 아마주어 음악인들도 전국적으로 광장, 교회, 도로, 병원 등 어디서나 음악을 연주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다. 시민의 능동적인 문화행사라는 의미가 있다. 이 음악축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매년 하지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발돋움하였다.

게다가 프랑스는 프랑스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외교부와 문화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프랑스어권의 보호와 확대를 위하여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하고 있으며, 자국 문화의 효과적인 해외 전파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문화야말로 세계로 뻗어나가 프랑스 위상을 드높이는 첩경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화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 문화예산 확보, 확보한 예산을 낭비 없이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문화 관리자, 문화 종사자의 임용, 교육, 전문화, ‘민주주의’ 문화정책의 실현이 오늘날 문화강국 프랑스를 탄생시킨 자양분들이다. 문화 강국 프랑스의 자산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는, 한류로 전 세계에 문화강국으로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을 알려주는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3. 한국적 인문정책의 방향

#### 4.3.1. 독일과 프랑스의 인문·문화정책 모델과 한국적 인문 정책의 구축

독일과 프랑스의 모델에서 국가 수준의 문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인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문 분야는 언제나 국가 경쟁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국가들도 그렇고, 로마는 말할 것도 없으며,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제국 역시 인문학을 중요하게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한국적 인문정책도 인문 경쟁력을 우위에 두는 정책 기조를 가져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창의적 인문·문화정책 모델을 비교하여 한국적 인문 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그것을 분석했다. 첫째, 통합적 인문학에 바탕한 인문정책 수립의 인간학적, 시대적,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 둘째, 한국적 인문정책의 토대 구축; 셋째, 한국적 인문정책의 실천전략 제시가 그것이다.

우리사회의 발전과 성장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사회 구성원의 행복이다. 창의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적 인문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여기에 인문학 연구의 비전과 인문학적 정책의 의미와 역할이 놓여 있다. 인문학은 인간 행복의 기본 조건에 대해 연구하며, 개인의 행복과 집단의 행복의 관계에 대해 해명해 주기 때문이다. 인간 행복을 위한 전(前)단계로 과학과 인문 문화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생명 현상에 대한 존중의 시각은 인문학의 근본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인문학은 근대 이후 계속되어 온 과학 문화와 인문 문화의 분리를 극복하고, 이 두 문화의 소통을 지향해야하며 이로부터 새로운 통합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 프랑스의 인문, 문화정책 모델은 우리나라의 인문학 육성체제와 그 범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한다거나,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당장 돈이 되지 않는 학문분야에 대해 독일, 프랑스 국가가 보여주는 공적인 관심은 실용학문이나 기술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창조적인 사고와 다양한 견해들이 자유자재로 활



보하는 역동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을 중요시해 온 오랜 학문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공적인 지원체제로 - 우리와 비교해 볼 때 - 전(全)학문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고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들 국가의 인문, 문화정책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적 인문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인문학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연구 및 두 국가의 인문·문화정책에 대한 고찰은 우리의 인문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국가의 인문·문화정책의 모델을 원용하여 도출한 한국적 인문정책의 수립 방향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일의 전체 학문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학술평의회(Wissenschaftsrat)’와 프랑스의 기초학문 분야 및 응용 학문분야의 국가 연구기관들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호협력 연구를 가능케 했던 ‘국립학술연구원(CNRS)’와 같은 고등 연구기관이 가까운 장래에 설치되어야 한다. 물론 독일과 프랑스의 기관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학문도 함께 다루고 있는 규모가 엄청난 기구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모델을 연구,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인문학 진흥을 전담할 상설 기구’를 설립해야함은 너무도 시급한 일이다. 또한 인문학 지원은 중앙의 어느 한 부처에서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의 모델에서 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지원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시민적 거버넌스와의 협력도 모색해야 한다.

2. 독일사회에서 인문학이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적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와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사회의 경제적 생산과 분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자본의 투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인문학의 잠재적인 국가경쟁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관련 연구개발을 경제 및 산업 분야와 연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문학 기초연구 외에 그 기초연구를 응용한 응용연구와 경제와 경영, 산업 분야와의 융합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

3. 18세기 독일사회가 창 의사회로 발전하게 된 핵심적 요인 중 하나는 문화와 예술의 지원이 정부와 군주에 의해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데 있다. 또한 상류 사회의 고급문화뿐만 아니라 다수 시민의 일상문화 내지 대중문화도 제도적으로 후원되고 장려되었다. 바이마르 공국의 궁정처럼 이른바 ‘문예궁정’으로 인정받는 궁정들은 문화와 예술을 후원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들을 끌어들이거나 배출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시기 독일에서 연극이 창조적 시민교육의 수단으로 추천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가능했고, 이것은 현재 독일사회의 문화정책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문화와 예술은 제도적 후원을 통해 일반 시민과 민중들까지 열정적이 되게 하고 이런 열정은 시민적 창의성은 물론, 대중문화의 창의성으로도 작용했다. 이와 같은 독일식 모델을 고찰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성 교육과 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단계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인문학적 창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전담하는 중앙과 지방의 부처가 필요하고 이 부처들이 다양한 예술문화단체들 및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인문학적 상상력에 의한 창의력은 인간의 기호, 감성 등에 맞는 상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기업들 내지 다양한 시민사회 거버넌스와의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4. 프랑스의 ‘국립학술연구원’의 2004년 개혁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와 연구기관, 그리고 경제계 및 사회단체가 함께 후원관계를 갱신해야 한다. 둘째, 연구는 교육-연구-개혁이라는 연속체 속에 자리매김해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또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사이에서 인공적인 종속관계를 뛰어 넘으면서 연구의 국가장치는 보다 넓게 개방되어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요구조건에 완전히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학

제간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실사평가에 기반한 계약관계와 예산운영은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5. 근대 이후 프랑스의 인문정책은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회 구현을 위한 인문적 문화정책의 구축에 집중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프랑스 정부는 문화가 국부의 원천이며, 국가의 평화와 안정, 화합을 이룩하는 초석이라는 시각에서 문화정책을 구축했다. 세계 최고의 문화 경쟁력과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그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국가 정체성의 수호와 국민적 통합은 막대한 행정적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인문, 문화정책의 문제점은, 대역사의 실현으로 다시 수도에 문화가 집중된 점, 국가의 분권화는 실현했지만, 지방의 지속적인 경제적 독립 문제, 시장 원칙에서 벗어난 과잉 문화 공급이란 국가 개입의 문화정책의 문제점, 일반 대중과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활용 등을 간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프랑스식 모델을 고찰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인문학과 인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명해진다. 정부의 리더십과 상생의 지방분권화, 자발적 시민참여와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소통구조의 형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관점의 교육시스템 마련, 이 모든 기능을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와 장치의 마련 등이 우리의 인문 정책에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세계적인 박물관, 음악당, 도서관의 건축은, 일차적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들여 경제적 부가가치가 클 뿐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자를 양성하여 문화강국의 미래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대중문화와 고급 엘리트문화를 차별 없이 지원하고, ‘문화소외지역’을 없애고자 전 국토의 민주적 문화개발에 힘쓰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든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평화로운 통합된 하나의 프랑스, 문화강국 프랑스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뜻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헌신과 막대한 행정적 노력의 결실임을 깨닫게 한다. 이

것은 우리의 정책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경우의 인문 내지 문화정책은 다양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의 법제화 및 통합적 운용도 필요하다.

7. 프랑스의 민주적인 문화정책은, 지역별로 문화적 차별을 경험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또 매년 사회 갈등에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를 통한 상처의 치유와 국민 화합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프랑스 민족 특유의 예술적 능력과 감각을 살려, 음악 축제 등으로 세계인의 축제를 주도하는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우리에게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와 한류를 국제적 감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의 대중문화와 교감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한 해법이라는 것도 인식하게 만든다. 한국적 인문정책은 이 점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8. 프랑스 문화정책의 문제점은, 거대건축역사의 실현으로 다시 수도 파리에 문화가 집중된 점, 국가의 문화 분권화는 실현했지만 지방의 지속적인 경제적 독립의 문제, 시장 원칙에서 벗어난 과잉 문화 공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국가의 과도한 문화개입의 문제점, 일반 대중과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활용을 위한 새로운 문화 향유의 모색 필요성 등등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사회에서도 일부 경험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프랑스의 국가주도의 문화정책의 강점을 배워, 한국적 인문정책 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프랑스의 문화정책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가 한국적 인문정책의 실행에서 부딪힐 수 있는 난관들이 무엇인지 미리 예측하게 하는 ‘예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3.2. 디지털 시대와 정보통신사회의 인문정책

디지털 시대와 정보통신사회에서 인문적 소양은 경제발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추격형 경제발전은 한계에 봉착하였고, 창의력 내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선도적 기술의 확보가 매우 중요

하게 되었다.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의 개발은 자연과학과 공학의 기술을 넘어서 인문사회과학적 발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20세기 말부터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대학에서는 공학도나 자연과학도를 위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이 더 한층 적극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독일 훔볼트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제 간 특별연구영역’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인문학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나아가서는 인문학의 외연 확대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그 프로젝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96)</sup>

- 고대 로고스 철학의 변형: 현재의 메타 윤리학
- 치료: 고대 의학의 변형
- 무계, 운동, 그리고 힘: 고대의 과학적 지식과 개념
- 연대기의 변형: 시간 개념과 우주사를 통한 인류 문화의 자화상
- 고대 건축 및 미술작품의 예술적 수용의 전제로서의 대상과 이미지 등등

이렇듯 인문정책의 기본방향은 앞으로 다가 올 인문시대를 예비하고 다양한 분야와 연관을 가지며 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문학과 관련된 광범위한 기본문헌들을 확립, 확충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문학 연관 영역들도 포함해서 도서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디지털 인문학 토대사업 등도 그 예가 될 것이다.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등의 한글화가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에 어떻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지 ‘대장금’ 등 여러 작품들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천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아바타’ 역시 인도의 고전에 나오는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광의의 인문학의 기본 문헌 확립과 확충은 우리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이른바 ‘미래 창의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조적 정보통신사회로의 긍정적 변화를

---

96) 베를린 훔볼트대학 문화학과 참조(<http://culture.hu-berlin.de>)

이루기 위해서도 한국적 인문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독일의 ‘학술평의회’와 프랑스의 ‘국립학술연구원’과 같은 ‘인문학 진흥을 전담할 상설 기구’의 설립이다. 이를 통해 정보기술과 사회과학 영역에 무게중심을 둔 기존의 정보통신 및 문화산업 관련 기관들과 차별을 두는 인문학 중심의 정보통신기관도 설립하고 이것이 기존의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게 해야 한다. 인문학 진흥 상설 기구는 위 모든 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가져 기관들 간에 제도적, 체계적 협력과 공조를 이룰 수 있게 지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은 인문학 관련 기관들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지금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분적으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인문학 관련 사업들은 인문학 진흥 상설 기구 속에서 총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학술평의회’는 1957년 9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행정협약으로 생겨났는데, 이 평의회는 학술위원회(연방 대통령이 임명한 22명의 위원)와 행정위원회(연방정부소속의 6명의 위원과 주정부가 파견한 11명의 위원)의 총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학술평의회는 학술위원회(연방 대통령이 임명한 32명의 위원)와 행정위원회(연방정부소속의 6명의 위원과 주정부가 파견한 16명의 위원)의 총 5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협정문은 2005년에 개정된 것이며 총 10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2조 1, 2항과 3조 1, 2항의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2조 1항: 학술평의회의 임무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에 상응하여 구조적으로 발전하는 대학, 학문, 연구에 관하여 권고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권고안들은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 밖에 학술평의회는 대학설립장려법에 의해 위임받은 임무를 지닌다. 그 밖에도 학술평의회는 주정부나 연방정부,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연방 및 주 정부 위원회’, 또는 ‘주 정부 교육부장관 회의’ 등의 요청이 있을 때, 대학, 학문, 연구의 발전에 관한 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2조 2항: 학술평의회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연방 및 주 정부 위원회’ , 또는 ‘주 정부 교육부장관 회의’ 의 요청에 의하여 의견서나 권고안을 낼 때 동 의견서나 권고안을 본 계약 당사자들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제3조 1항: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학술평의회 권고안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2항: 연방과 주의 각 관계 관청은 상시 보고와 정보 제공을 통해 학술평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주 정부 산하 기관들과의 업무 소통은 학문 행정을 담당하는 주 정부 최고 기관이, 그리고 연방정부 산하 기관들과의 업무 소통은 연방정부 학문성이 담당한다.)

이 평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내어놓은 보고서 중에는 한국적 인문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방안들이 몇 개 들어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학문후속세대 양성 방안, 교사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대학교육 개혁방안, 국가시험제도의 개선과 국제화 방안, 대학의 ‘특별연구영역’ 의 확대 및 장려 방안, 우수 선도 사업 방안 등인데, 이러한 방안들 중 일부는 벌써 우리에게 소개되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의 ‘국립학술연구원’ 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인 1939년 10월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국립학술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특성화되어 있지 못했던 기초학문 분야 및 응용 학문 분야의 국가 연구기관들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호협력 연구를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국립학술연구원은 1970년대에 공학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응용학문 분야로 관심을 돌렸고, 198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를 혼합한 학제간 연구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렇게 학제간 연구 방식을 도입하고 여타 기관 혹은 사기업과의 활발한 협력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립학술연구원은 프랑스의 학문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다. 1982년 11월에 수정된 국립학술연구원 칙령의 내용 중 그 세부적인 사업목적의 1항(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과학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연구

프로그램의 수행, 감독 및 평가의 사명을 지닌다.’ ) 역시 한국적 인문정책 방향이 나아갈 바를 시사하고 있다.

인문학은 전통적으로 산업과는 관계없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유럽의 경우 정부 자체가 사회의 다른 요소보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재삼 확인하고 있다. 인문학은 즉각적인 효용가치가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많은 인문학 자료들이 디지털 형식으로 국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해리포터’와 같은 인문학적 상상력이 영상화되어 막대한 부를 국가에 축적시켜 주기도 한다. 우리도 이기일원론, 이기이원론 등의 사상에서, 또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축적된 자료에서 유교문화권 연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디지털화 사업은 단기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자료수집과 해제작업, 문화대백과사전, 정본화 사업, 고전의 번역과 주해 사업 등 적어도 5년 이상의 단위로 각 사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지원체제가 절실하다. 자료수집의 예로서 각 지방의 향교, 서원, 사찰에 소장된 문서뿐만 아니라 외국에 흩어진 자료에 대한 발굴도 차제에 병행해야 할 것이다. 18세기 후반 이후 맥이 끊겼던 민족문화를 집대성하는 사업의 일환이었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방의 향토문화를 새로이 보존 계승하는 차원에서 향토문화디지털사업 등도 또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종국적으로, 인류의 지속적 확대 및 고급화와 맞물려 우리의 빛나는 인문자산인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 고전의 한글 디지털화는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의 관련 중앙부처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적당한 기관에 이 일을 위임해서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세계적인 박물관, 음악당, 도서관과 공연예술극장은 전세계 관광객들을 불러들여 경제적 부가가치가 클 뿐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와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자를 양성하여 문화강국의 미래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대중문화와 엘리트문화와의 차별을 없애고, 특히 문화소외지역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박물관과 도서관은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충분히 디지털융합박물관과 디지털융합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다. 음악당과 공연예술극장 역시 디지털 융합을 통해 대중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실제로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연예술극장과 음악당은 디지털 융합을 통해 단순히 공연만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 교육의 현장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인문예술경영의 영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 모델은 현재 독일과 프랑스의 인문예술경영 기관을 참고로 하면 많은 암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독일의 〈그립스 극장 Grips Theater〉, 〈리미니 프로토콜 Rimini Protokoll〉, 〈베를린 필하모니 Berliner Philharmoniker〉,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등의 예술경영단체들의 예술경영 노하우와 그 단체들이 지방자치정부와 지역자치기관 및 단체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상호지원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참고하면 이와 관련된 인문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서인 문체부, 교육부, 미래창조부 등에 이르면 디지털인문문화융합과 인문예술경영 관련 과(課)나 국(局)을 신설하고 이를 총괄할 부서를 총리실 산하에 두면 좋겠다.

지역 축제와 공연도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인문정책 필요하다. 이것은 주로 지방자치정부와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안, 실행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전체적인 세밀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있을 수 있는 정책의 혼선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디지털인문정책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밀히 갖추어 놓는다면 지역 축제와 공연에서도 지금까지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피하며 더욱 확장되고 파급력이 강력하며, 동시에 효율적인 축제와 공연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자치단체는 이

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디지털인문정책 규정과 시스템에 따라 적절한 부서를 설립하고 하위규정을 제정해서 그것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시 주관의 다양한 축제와 공연을 위해서는 서울시 산하에 디지털인문정책과(課)를 신설하거나 혹은 기존 부서에 이 임무를 연계해서 축제와 공연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여 확장된 인문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예컨대, 전통적 축제와 공연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디지털 기술로 연결하는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공연의 무대 배경과 장치, 공연 의상과 소품 등등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차원적 영상과 생동하는 이미지를 동시에 생산하며, 이것들을 자료로 보존하는 일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문정책의 입안과 추진 및 인문정책 관련 포괄적 교육과 전문적 연구도 수행하는 한국형 인문정책자문총괄기관을 (한국)인문학진흥상설기구로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기관에서는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관련 업무와 교육부의 인문학 교육 및 연구지원 기능을 연계시킬 수 있는 인문학 육성체제를 수립하는 일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인문학의 연구나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특히 국민들에 대한 인문교육이나 지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통해 국가관을 투철하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간재단이나 기업들의 인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이나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 그룹 SOS 등은 특히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연간 수만 유로의 연구비를 지원함은 물론, 안정되게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 보다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민간재단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여기에는 인문

학을 지원하는 재단이나 기업들에게 조세 혜택을 주는 조세제도의 정비도 포함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인문학을 지원하는 민간재단이나 지원기관이 늘어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독일,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인문학 육성체제는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  
호 직접적, 평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도 가질 수  
없으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인  
인문정책 모델과 현재 독일의 학술평의회와 프랑스의 국립학술연구원에서의  
인문학 지원체제와 그 실천 과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창의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적 인문정책’은 ‘인문학 진  
흥을 전담할 상설 기구’의 설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확인시켜준다.

첫째, 인문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학문으로 정초하도록 각급 교육과정과 교  
과내용을 개선하고, 인문학 전공자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체계 등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할 것. 둘째,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인문학적 시각  
의 분석연구 및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학제적 협동연구를 통하  
여 선도적인 성과를 제시할 것. 셋째, 디지털 인문연구, 고전번역 등을 통해 우  
리 사회의 인문정신을 고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sup>97)</sup> 넷째, 정부의 리더십과 상생의 지방분권화, 자발적 시민참여와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소통구조의 형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  
합적 관점 등이 우리의 인문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 다섯째, 창의성 교육과  
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중등교육단계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인문학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 등이다.

---

97) 박경하, 전영평, 이종수(2002),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형성 연구, 인문사회연구  
회 인문연구정책총서 2002-49, 69쪽 참조.

궁극적으로 미래 한국적 인문정책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문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인문학이 국가경쟁력의 요체이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인문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한국적 인문정책은 각 영역별로 분절된 형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예술정책, 문화재정책, 인문복지정책, 문화산업정책 등 문화를 포함한 인문정책을 구성하는 각 영역별 정책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관광, 교육, 복지, 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 사회통합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 김경욱,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문화경제연구』, 제 6-2호, 2003.
- 김명섭, 「프랑스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 프랑수와 미테랑의 집권기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11집, 1999.
- 김명섭, 「프랑스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프랑수와 미테랑의 집권기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11호, 1999,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 김명섭, 「프랑스의 문화외교: 미테랑 대통령의 집권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37-2호, 2003, 한국정치학회.
- 김수일,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의 역할」, 『원광인체과학회지』, 제11집, 2010.
- 김진나 외, 「인문학의 위기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유티틀’ 모색」, 『비평과 이론』, 제4권 제1호, 1999.
- 목수정, 「문화민주화, 문화다양성, 지역분권: 프랑스 문화정책의 세 가지 미션」, 『문화예술』, 제 327호, 2007.
- 문시연, 「프랑스 문화정책 50년: 문화 민주화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 연구』, 제 30호, 2009, 프랑스 문화예술학회.
- 박명립, 「지식의 인간성, 학문의 사회성, 교육의 공공성」, 『동방학지』, 제156집, 2011.
- 박승억, 「총체적 디지털화와 인문학의 미래」, 『인문과학』, 제48집, 2010.
- 박영도, 「아렌트, 하버마스, 성찰적 공공성: 사회 인문학적 고찰」, 『동방학지』, 제155집, 2011.
- 백영서, 「사회인문학의 지평을 열며 - 그 출발점인 ‘공공성의 역사학’」,

- 『동방학지』, 제149집, 2010.
- 서문기,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간의 인문학적 고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인문정책연구과제 성과 발표회 자료집』, 2012.
- 신옥근, 「클로드 몰라르의 프랑스문화시스템도표를 통해 본 프랑스문화정책의 변천과 문화국토개발」, 『프랑스문화예술 연구』, 제 43호, 2013, 프랑스 문화예술학회.
- 신중섭, 「‘공정한 사회’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시민인문학』, 제20호, 2011.
- 오세정, 「프랑스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정책」, 『프랑스문화예술 연구』, 제9호, 2003, 프랑스문화예술학회.
- 오양열, 「체제수호의 사상적 무기, 신사고에 의탁한 변화에의 갈망」, 『문예연감』, 200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오정숙, 「유럽연합 문화정책 수립과정에서 프랑스의 역할과 전략 -culture 2000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 연구』, 제34호, 2010, 프랑스 문화예술학회.
- 오정숙, 「프랑스의 문화콘텐츠 디지털화 정책과 유럽의 현황」, 『프랑스문화예술 연구』, 제24호, 2008, 프랑스 문화예술학회.
- 오정숙, 「프랑스의 유럽, 유럽화된 프랑스: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프랑스학연구』, 제41호, 2007, 프랑스학회.
- 임문영, 「앙드레 말로와 자크 랑의 문화정책 비교」, 『한국프랑스학논집』, 제37호, 2002, 한국프랑스학회.
- 임학순, 「프랑스 센느내셔널의 문화적 경영사례」, 『문화예술』, 제4월호,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1997.
- 정선양,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199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최현철, 「인문학과 인문학 교육에 대한 소고」, 『시민인문학』, 제23호, 2012.
- 하상복,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군주제와 공화제 원리의 공존」, 『문화정책논총』, 제 17호, 200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홍병선, 「행복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에 관한 연구」, 『시민인문학』 제21호, 2011.

## 2. 단행본

고봉만 외, 『프랑스 문화예술, 악의 꽃에서 샤넬 no.5까지』, 한길사, 2001.  
김광웅, 『국가의 미래. 미래창조사회, 지식지도가 바뀐다』, 매일경제신문사, 2008.

김용학,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2004.

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최갑수 옮김, 까치, 1995.

더글러스 러미스,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김종철외 옮김, 녹색평론사, 2011.

데즈먼드 모리스, 『인간의 친밀행동』, 박성규 옮김, 지성사, 2003.

마우리치오 라자라토, 『부채 인간』, 허경 옮김, 메디치, 2012.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송도형 · 이호영 · 조현영, 『프랑스의 문화산업체제』, 지식마당, 2003.

에드가 칸,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아르케, 2004.

에드워드 윌슨, 『지식의 대통합 통섭』, 최재천 · 장대익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5.

울리히 벡,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옮김, 새물결, 1997.

윤영수 · 채승병, 『복잡계 개론. 세상을 움직이는 숨겨진 질서 읽기』, 삼성경제연구소, 2007.

장 자크 루소, 『인간불평등 기원론』, 주경복 옮김, 책세상, 2003.

장희익, 『온생명과 환경, 공동체적 삶』, 생각의 나무, 2008.

제레미 리프킨, 『유리피언 드림』, 이원기 옮김, 민음사, 2005.

조명래, 『개발정치와 녹색 진보』, 환경과 생명, 2006.

존 홀런드, 『숨겨진 질서』, 김희봉 옮김, 사이언스북스, 1995.

-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 케네스 월츠, 『인간, 국가, 전쟁 - 국제정치이론의 분석』, 김광린 옮김, 소나무, 1988.
- 하워드 블룸, 『집단정신의 진화』, 양은주 옮김, 파스칼 북스, 2003.
- 홍성태, 『지식사회 비판』, 문화과학사, 2005.
- Anders, Günther: Die Antiquiertheit des Menschen, Bd. I: Über die Seele im Zeitalter der zweiten industriellen Revolution, München, 1956.
- Bach, Thomas/Breidbach, Olaf(Hg.): Naturphilosophie nach Schelling. Stuttgart-Bad Cannstatt, 2005.
- Balandier, Georges, Le Pouvoir sur Scènes, Editions Balland, 1992.
- Bartolo, Julia Di: Selbstbestimmtes Leben um 1800. Sophie Mereau, Johanna Schopenhauer und Henriette von Egloffstein in Weimar-Jena. Heidelberg, 2008.
- Beck, Ulrich: Was ist Globalisierung? Irrtümer des Globalismus-Antworten auf Globalisierung, Frankfurt a.M. 1997.
- Becker-Cantarino, Barbara: Meine Liebe zu Büchern. Sophie von La Roche als professionelle Schriftstellerin. Heidelberg, 2008.
- Berger, Joachim: Anna Amalia von Sachsen-Weimar-Eisenach (1739-1807). Denk- und Handlungsräume einer 'aufgeklärten' Herzogin. Heidelberg, 2003.
- Beuthan, Ralf(Hg.): Geschichtlichkeit der Vernunft beim Jenar Hegel. Heidelberg, 2006.
- Bleeschmidt, Stefan/Heinz, Andrea(Hg.): Dilettantismus um 1800. Heidelberg, 2007.
- Bleeschmidt, Stefan: Goethes lebendiges Archiv. Mensch -



- Morphologie – Geschichte. Heidelberg, 2009.
- Bloom, Howard: Global Brain, Die Evolution sozialer Intelligenz, Stuttgart, 1999.
- Borchert, Angela/Dressel, Ralf(Hg.): Das Journal des Luxus und der Moden: Kultur um 1800. Heidelberg, 2004.
- Bowman, Brady/Vieweg, Klaus(Hg.): Die freie Seite der Philosophie. Skeptizismus in Hegelscher Perspektive. Würzburg, 2006.
- Breidbach, Olaf/Flidner, Hans-Joachim/Ries, Klaus(Hg.): Lorenz Oken(1779–1851). Ein politischer Naturphilosoph. Weimar, 2001.
- Burke, Peter: Papier und Marktgeschrei, Die Geburt der Wissensgesellschaft, Berlin, 2001.
- Castells, Manuel: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xford, 1996.
- Caune, Jean: La culture en Action, PUF, 1992.
- Cédoc, C.: L'Etat de la France, Paris, La Découverte, 1994.
- Christoph, Andreas: Geographica und Cartographica aus dem Hause Bertuch. Zur Ökonomisierung des Naturwissens um 1800. Paderborn: Wilhelm Fink, 2012.
- Cook, Malcom: French Culture since 1945, London, Longman, 1993.
- Davis, Erik: TechGnosis. Myth, Magic and Mysticism in the Age of Information, New York, 1998.
- Djian, Jean-Michel: La politique culturelle, Le Monde Editions, 1996.
- Dulphy A. et Manigand C.: La France au risque de l'Europe, Armand Colin, 2006.
- Eckardt, Georg/John, Matthias/van Zantwijk, Temilo/Ziche, Paul(Hg.): Anthropologie und empirische Psychologie um 1800. Ansätze einer Entwicklung zur Wissenschaft. Köln, Weimar, Wien,

2001.

- Elliott, J.H.: Power and propaganda in the Spain of Philip IV, Sean Wilentz (ed.) Rites of Power : symbolism, ritual and politics since the Middle ages, Univ.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985.
- Frindte, Julia/Westphal, Siegrid(Hg.): Handlungsspielräume von Frauen um 1800. Heidelberg, 2005.
- Fumaroli, Marc: L'Etat culturel, Essai sur une religion moderne, Editions de Fallois, 1991.
- Galante, Pierre: Malraux, Plon, 1971.
- Giesecke, Michael: Von den Mythen der Buchkultur zu den Visione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Frankfurt a.M. 2002.
- Grave, Johannes/Locher, Hubert/Wegner, Reinhard(Hg.): Der Körper der Kunst. Konstruktionen der Totalität im Kunstdiskurs um 1800. Göttingen, 2007.
- Greiling, Werner/Schulz, Franziska(Hg.): Vom Autor zum Publikum. Kommunikation und Ideenzirkulation um 1800. Bremen, 2010.
- Grochowina, Nicole: Das Eigentum der Frauen. Konflikte vor dem Jenaer Schöppenstuhl im ausgehenden 18. Jahrhundert. Köln, Weimar, Wien, 2009.
- Hahn, Hans-Werner/Hein, Dieter(Hg.): Bürgerliche Werte um 1800. Entwurf – Vermittlung – Rezeption. Köln, Weimar, Wien, 2005.
- Hartmann, Frank: Globale Medienkultur. Technik, Geschichte, Theorien, Wien, 2006.
- Hochadel, Oliver: Öffentliche Wissenschaft. Elektrizität in der deutschen Aufklärung, Göttingen, 2003.
- Jean Michel Dijan: La politique culturelle, Le Monde Edition, 1997.

- Kreutzmann, Marco: Zwischen ständischer und bürgerlicher Lebenswelt. Adel in Sachsen-Weimar-Eisenach 1770 bis 1830. Köln, Weimar, Wien, 2008.
- Kublik, Steffan: Die Universität Jena und die Wissenschaftspolitik der ernestinischen Höfe um 1800. Marburg, 2009.
- Le Brun-Cordier, Pascal: La crise de la politique culturelle française in Contemporary French Civilization, v. XXIX, n. 1, 2005.
- Lehmann, Kai/ Schetsche, Michael (Hg.): Die Google-Gesellschaft. Vom digitalen Wandel des Wissens, Bielefeld, 2005.
- Léonard, Yves: Culture et Société, in Cahiers français, n° 260, mars-avril, 1993,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Maatsch, Jonas: Naturgeschichte der Philosopheme. Frühromantische Wissensordnung im Kontext. Heidelberg, 2008.
- Manger, Klaus/Pott, Ute(Hg.): Rituale der Freundschaft. Heidelberg, 2006.
- Mesnard, André-Hubert: La politique culturelle de l'Etat, PUF, 1974.
- Middell, Katharina: "Dann wird es wieder ein Popanz für Otto." Das Weimarer Landes-Industrie-Comptoir im Übergang zum Familienunternehmen (1800-1830). Leipzig, 2006.
- Mollard, Claude: Le 5e pouvoir: la culture et l'Etat de Marlaux à Lang, Paris, Armand Colin, 1999.
- Mollard, Claude: L'ingénierie culturelle, PUF, 2ème éd., 1999.
- Müller, Gerhard: Vom Regieren zum Gestalten. Goethe und die Universität Jena. Heidelberg, 2006.
- Nadaud, Marie-Anne Ronfle: Cahiers français: Culture et société,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3.
- Poirrier, Philippe: Les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2.

- Poirrier, Philippe: L'Etat et la culture en France au XXe siècle, Le Livre de Poche, Paris, 2000.
- Postman, Neil: Die zweite Aufklärung. Vom 18. ins 21. Jahrhundert, Berlin, 2001(1999).
- Poulot, Dominique: Patrimoine et musées: L'institution de la culture, Paris, Hachette, 2001.
- Regensburger, Katja/van Zantwijk, Temilo(Hg.): Wissenschaftliche Anthropologie um 1800? Stuttgart, 2005.
- Rieger, Stefan: Die Ästhetik des Menschen. Über das Technische in Leben und Kunst, Frankfurt a.M. 2002.
- Rieger, Stefan: Die Individualität der Medien. Eine Geschichte der Wissenschaften vom Menschen, Frankfurt a.M. 2001.
- Rifkin, Jeremy: European Dream, Blackwell 2004.
- Rigaud, Jacques: La Culture pour vivre, Paris, Gallimard, 1975.
- Rigaud, Jacques: L'Exception culturelle : culture et pouvoirs sous la Ve République, Paris, Bernard Grasset, 1995.
- Schimma, Sabine/Vogl, Joseph(Hg.): Versuchsanordnungen 1800. Zürich, 2009.
- Schmidt-Funke, Julia A.: Auf dem Weg in die Bürgergesellschaft. Die politische Publizistik des Weimarer Verlegers Friedrich Justin Bertuch. Köln, Weimar, Wien, 2005.
- Schöttker, Detlev(Hg.): Mediengebrauch und Erfahrungswandel, Göttingen, 2003.
- Siemek, Marek J.: Vernunft und Intersubjektivität. Zur philosophisch-politischen Identität der europäischen Moderne, Baden-Baden, 2000.
- Sloterdijk, Peter: Im Weltinnenraum des Kapitals. Für eine philosophische Theorie der Globalisierung, Frankfurt a.M.

2005.

Stehr, Nico: Wissen und Wirtschaften. Die gesellschaftlichen Grundlagen der modernen Ökonomie, Frankfurt a.M. 2001.

Stehr, Nico: Wissenspolitik. Die Überwachung des Wissens, Frankfurt a.M. 2003.

Urfalino, Philippe: L'intention de la politique culturelle, Hachette, 2004.

Ventzke, Marcus(Hg.): Hofkultur und aufklärerische Reformen in Thüringen. Die Bedeutung des Hofes im späten 18. Jahrhundert. Köln, Weimar, Wien, 2002.

Ventzke, Markus: Das Herzogtum Sachsen-Weimar-Eisenach (1775-1783). Ein Modellfall aufgeklärter Herrschaft?. Köln, Weimar, Wien, 2004.

Vieweg, Klaus/Bowman, Brady(Hg.): Wissen und Begründung. Die Skeptizismus-Debatte um 1800 im Kontext neuzeitlicher Wissenskonzeptionen. Würzburg, 2003.

Warespiel, Emmanuel de: Dictionna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 de la France depuis 1959, Larousse, Paris, 2001.

Wegener, Reinhard(Hg.): Kunst - die andere Natur. Göttingen, 2004.

프랑스 문화통신부 <http://www.culture.gouv.fr/>

프랑스 문화 탄생 50주년 기념 홈페이지 <http://www.50ans.culture.fr/>



## 창의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적 인문정책 연구

— 독일, 프랑스의 창의적 인문문화정책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8층  
[www.nrscs.re.kr](http://www.nrscs.re.kr)

비매품



9 791155 670613

ISBN 979-11-5567-061-3

ISBN 979-11-5567-043-9 (세트)